

제329회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11월6일(목)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
 - 가. 환경부 소관
 - 나. 기상청 소관
 - 다. 고용노동부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환경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 2
 - 가. 환경부 소관
 - 나. 기상청 소관
 - 다. 고용노동부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
 - 가. 환경부 소관

(09시47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통

해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러한 정책대안들이 내년도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지만 이를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것은 국회의 몫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관부처 예산이 어떤 사업에 얼마나 적절하게 편성되느냐에 따라 환경노동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수집된 정보와 자료들을 심분 활용해서 오늘 상정되는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전에는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차관과 기상청 차장은 예결위가 오늘 10시에 개최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 가. 환경부 소관
- 나. 기상청 소관
- 다. 고용노동부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환경부 소관

(09시50분)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환경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5개의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

로복지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회의 일정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부 소관 예산안 개요는 이미 의원실에 사전 배부되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살펴보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환경안전 관리체제를 선진화하고 고품위 환경복지의 구현을 앞당기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 대비 1.8% 증액된 4조 966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체세입 1조 2135억 원, 일반회계 진입금 3조 752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 예산 규모는 5조 6289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4% 늘어난 216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 4조 5610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8172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684억 원,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23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 재정사업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안전 관리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노후도를 정밀 조사·진단하여 기반침하에 대처해 나가고 도심지역 우수저류시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등 재난대비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를 확대하여 집중호우와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화학사고 시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사고 피해지역의 효과적인 방제와 복구를 위한 신규 R&D 사업도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낙석,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국립공원 내 재해위험지구를 정밀 조사하여 정비하는 한편 방재장비를 확충하여 탐방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둘째, 미래세대를 위한 생산적 환경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래 핵심 환경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우수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금년보다 11.9% 증가된 3278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생물자원에서부터 유용한 소재나 원료를 발굴하여 국내 생물산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연비가 일반승용차 대비 평균 40% 좋고 이산화탄소도 km당 100g 이하로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에게 대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 한편 전기자동차도 보급대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과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도 수용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고품위 환경복지의 조기 구현에도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하천수질 개선, 위생적인 하·폐수 처리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문에 2조 4452억 원을 투자하고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충하고 예·경보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며 지하철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소관 기금의 내년도 운영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규제로 상수원지역이 받고 있는 고통과 부담을 하류지역이 분담하도록 하는 수계관리기금을 9547억 원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

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긍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기금 445억 원을 조성하여 석면피해자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외로 편성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 1985억 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빠른 기간 내에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는 2015년도 예산안이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 분야의 투자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환경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기상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상청 소관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위원님들께서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기상청은 업무목표를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정보,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로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힘껏 달려 왔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기상 협업서비스와 기상정보 활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기상기후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 향상과 행복한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기상기후자료 빅데이터 융합서비스와 자료개방 확대 등으로 기상기후정보를 자원화하고 기상산업을 활성화하여 풍요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 단·중기 예보 기간 확대,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와 튼튼한 국가를 위한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기상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상기술 공여와 서비스 확대로 국제협력의 실효성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기상업무 수행기반 마련을 위해 세계 수준의 수치예보기술 확보와 첨단 입체 기상관측망 구축, 슈퍼컴퓨터 자원의 산학연 공동활용, 국민생활 중심의 기상 과학문화 확산 등으로 각종 기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상청 예산안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 구현과 국정과제 및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위험기상과 지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기상위성 연구개발과 기상산업 활성화 등으로 위험기상 감시 강화와 기상기후산업 진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기후정보 생산·제공 등 지역기후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선진 장기예보 생산체계 구축과 더불어 이상기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상기후산업 기반 조성과 기상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기상장비 국산화 등 핵심 기상기술 개발 등 기상기후산업 진흥 확대를 중심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상청 전 직원은 지속적인 기상기술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35억 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3863억 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3490억 원에 비해 10.7% 증가하였

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프로그램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기상용 슈퍼컴 운영,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 등 기상예보 부문에 431억 원입니다.

둘째, 지상·해양·고층 기상관측 및 지진관측 등 기상관측 부문에 529억 원입니다.

셋째,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기후분야 국제협력 활동 강화 등 기후변화 과학 부문에 139억 원, 기상산업 활성화,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및 국가기후자료관리 서비스 등 기상산업정보 부문에 295억 원입니다.

넷째, 선진기상 기술개발 및 기상업무지원 기술개발과 기상관측위성 개발 등 기상연구 부문에 1227억 원, 항공기상청 운영을 위한 책임행정기관 부문에 136억 원입니다.

다섯째, 국제 기상협력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등 국제협력 교육홍보 부문에 80억 원, 본청 및 소속기관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기상행정지원 부문에 1027억 원입니다.

기상청의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상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안 개요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기상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2015년도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은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에 따라 환경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라는 노후 상수관에 대한 정밀진단 및 실태조사 등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며 화학사고 등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안전분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75% 이상이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재정법의 특별회계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올해에도 5000억 원 이상이 미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정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부문의 지방상수도사업은 지자체의 개별적 운영에 따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운영효율상의 한계, 지자체 간 요금격차 등 서비스 불균형, 재정악화에 따른 시설개선 미흡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시설개량이 시급함에도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수도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위주의 재정투자에서 노후 상수관이나 노후 정수장 교체 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관리기반 구축사업은 라돈 등 자연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마을 상수도를 음용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전수조사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이와 같은 규모의 사업물량으로 조사할 경우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관리사업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 제조 및 불법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나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동 분쇄기를 관리감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4월에 입법예고된 하수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100% 분쇄배출하는 분쇄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대한 단속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진단조사 지원사업은 기반침하 및 싱크홀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실제 소요예산액을 산정하여 정밀진단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정밀진단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낙동강 수계 외 지역으로 확대 설치에 따라 신규로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할 계획이나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폐수발생량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이므로 설치 시급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사업과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은 각각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지자체 고유사업이지만 국고 지원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사업 대상 선정과 사업평가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대기 부문의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연기에 따른 대안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조예산을 290% 증액하였으나 최근 3년간 집행률이 60~70%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집행률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1대당 100만 원을 보조하려는 신규사업이나 당초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몰예정이던 세제혜택이 연장될 것이므로 세제혜택과 함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자연 부문의 국립생태원 출연사업은 조속한 기관 정상화를 위하여 서천군과의 갈등 해소 및 연구직의 호봉인정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2015년도 입장객 수 추계에 따른 자체수입이 과소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운영사업은 11월 현재까지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법인화 준비과정을 거쳐 개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

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휴식공간 확대사업은 도시 소생태계 구축 사업 및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과 함께 도심지역에 생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나 각각 재원과 국고보조율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현재 동 사업들 모두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인 환경생물산업소재 발굴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을 하는 등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국립생물자원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유사사업이 존재하므로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2015년부터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이관되었으나 고용보험기금은 사업 대상을 피보험자에 한정하고 있고 성과지표가 취업률·고용유지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학생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동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건센터 운영 사업은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 1개소를 추가 지정하려는 계획이나 기 지정된 13개 환경보건센터에서 유사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센터 간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공고 등 지정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사업은 8월 말 현재 정부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을 완료한 상태이고, 2014년도 예산액의 70%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지급하는 의료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경제적·건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의료비 지원 외의 타 항목 지원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증진 사업은 생물다양성협약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 반해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생물다양성과학기구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은 동 협약의 후속사업과 성격이나 목적이 다르고, 사업의 목적 측면에서도 국립생태원 출연사업과 일부 중복되어 보이므로 국립생태원의 출연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일관성과 예산의 명확성 측면에서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사업은 면밀한 예측과 분석으로 잠재적인 석면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원발성 폐암으로 인한 잠재적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진단법을 개발하여 신속하게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석면진단 지원 사업은 석면조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15년도에 500개소를 조사하더라도 내년까지 조사대상의 5%만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어린이집이 영유아들이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하는 공간임을 고려해 볼 때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보역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관측역량은 지상·해양 및 고층 기상관측망 등을 통해 확보되며, 이 중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9.3% 증액되었는데 선진국 수준인 육상 관측망에 비해 해양과 고층 관측망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상 해양이 전체 기상관측에 미치는 역할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상·해양 및 고층 관측망 구성과 관련하여 각 관측망의 향후 구성 비중을 포함한 기상관측망 종합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상산업활성화사업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출연금 19억 9600만 원 증액은 역무대행사업을 민간에게 이양하고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본래의 기관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 및 기관역량 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날씨경영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 지원

사업의 경우 특별기상서비스 지원 등 일부 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 여지가 있고, 날씨경영 솔루션 오픈마켓 구축 사업은 현재 시장의 거래량,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시스템 구축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항공기상관측망 구축 및 장비운영 사업 중 LIDAR 임차료 예산으로 계상된 11억 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집행될 예정이나 소송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료 일부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김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첫 번째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오전에 모두 마쳐야 하므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로 이자스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스민 위원** 질의에 앞서 환경부장관님께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당초의 법안 취지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시행대안으로 우회하는 것에 여러모로 유감스럽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확정된 정부의 시행대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장관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이 2020년 말까지 유예되면서 내년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자스민 위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환노위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이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

찬가지입니다.

장관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 40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2000년 초부터 중반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중단한 건데 다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기대효과를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연비도 일반차에 비해서 40%가 좋고요, 또 그만큼 온실가스가 덜 나옵니다. 지원대상은 저희가 그중에서도 온실가스가 km당 100g 이하로 나오는 차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큰 차는 제외하고 작은 차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현재 일반차에 비해서 한 100만 원 남짓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기능에 맡겨 놓고 있으면 보급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몇 년째 3% 이내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을 형성하려면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한 1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시장형성이 되고 또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지 또는 에너지절약 이런 쪽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제도를 세제혜택 외로 추가로 해야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주 위원장, 이인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자스민 위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제혜택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삼백몇만 원의……

○**환경부장관 윤성규** 310만 원……

○**이자스민 위원** 300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 100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수요 예측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는 2015년 차량 수요를 4만 대로 예측을 했는데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2만 5000대보다 약 50~60% 높은 수치인데 목표달성 가능한지, 장관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현재 하이브리드차가 그래도 수요가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신차들이 출시돼 가지고 신차 출시효과도 아울러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4만 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사례는 또 일본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또 신차가 출시되면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이걸 기업주만 좋은 제도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런 친환경 차들은 초기에 시장기능에 맡겨 놔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CNG버스도 그렇고 또 옛날에 삼원촉매장치도 그렇고 정부가 초기에 개입을 해 가지고 격차를 줄여 줘야만 시장기능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차 정책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국내시장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차 수가 적고 아직 초기시장 단계로 시장수요가 변동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본 사례와 같은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측한 신규 수요의 창출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사실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생산율은 5위 되지만, 품질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친환경 차에 관련된 각종 시스템을 보면 선진국하고 거리가 좀,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 친환경 자동차는 원천기술의 확보라고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는데 남들한테는 로열티를 내놓으라고…… 자신은 남는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개발 관련되거나…… 특허를 얻는 거나 개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지급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제작업체가 적극적으로 하이브리드차의 성능 향상에 나서도록, 그리고 우리의 원천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계속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댓 국가를 갔을 때 하던 이야기가 워낙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혜택을 갖다 내놓아도 신규 일본 자동차를 출시하게 되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판매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기술개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신중한 검토 뒤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잘 집행해서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바라라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다음은 아까 말씀, 시간이 별

로 없어서……

사실상 저번에 말씀드린 거지만 2015년 정부예산을 보면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 연기로 인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증액했지만 충전기 정기점검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새로운 충전기를 만들 예정인데, 100억 원이나 예산을 배치했는데, 그런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있는 충전기마저도 7%만 환경부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절대로 정기점검을 못 받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급속충전시설 운영비 항목으로 4억 3900만 원 편성했지만 이는 순수한 충전기 사용에 따른 전기세 비용으로 충전기 정기점검을 위한 인건비나 출장비는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관리에 대한 예산 배정 없이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겠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자스민 위원** 내년엔 갑자기 전기자동차에 대한 그런 예산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전인프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 100억 원씩이나 새로운 충전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점검을 하는 그런 회사 중 문 닫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업체랑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업체가 기존에 있는 시설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산이 지금 4억 3900만 원 반영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같은 것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스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이자스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4대

장 문제를 죽 얘기했는데 4대강 문제가 다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문제를 제가 죽 지적했는데 이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내년까지 하는 거지요, 3년이나 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까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죽 해왔는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수질에 관련된 데이터하고 우리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수질데이터가 굉장히 달라요. 그게 사후환경조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엉터리다 이런 지적을 제가 계속 죽 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있는 수치인데요.

낙동강의 경우에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에서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비해서 사후환경평가한게 38%, 40%로 이렇게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지적하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금년에 들어올 보고서가 들어왔다는 보고는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요, 보고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물환경정보시스템하고 잘 비교하시고, 그런데 그건 2013년 것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거는 저만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고 KEI에서 4대강 공사 준공 이후에 2013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내놨는데 거기에 네 가지,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후환경영향에 대한 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재수립하고, 부정확하게 제시된 주요 사항에 대한 검증 및 조치를 하고, 부실작성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하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부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조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런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금년에 보고서가 들어오고 또 KEI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시행규칙에 보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놓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업자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우원식 위원** 조치를 하면 지금 4대강 때문에 발생하는 데 들어가는 정부의 예산은 없애고 사업자가 그 예산을 대서 고쳐야 돼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사업자가 고쳐야 됩니다.

○**우원식 위원**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이 다시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5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전문기관의 검토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아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검토예산이 지금 1억 원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한 건당 52만 원에 200건, 그래서 1억 4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4대강은 공사가 큰 데도 있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52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꼭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리는 KEI가 이 4대강에 대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조사하고, 제대로 조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좀 늘려야 됩니다. 적정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52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런 것이 KEI의 검토를 한 사람들의 의견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하니까 이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석면 관련해서 어린이집, 전문위원이 보고도 하고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1000㎡ 미만의 학원 30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1억 5000을 넣어 놔놔야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4의 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시설·노인시설 이거는, 특히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경우만 대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학원이 문제가 되는데 학원은 1000㎡ 이상인 경우가 의무시설로 돼 있거든요. 학원은 얼마 전에 보고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보고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 여기에서 조사했더니, 대치동·중계동 이런 데 했더니 조사결과 80~90%가 석면 자재를 쓰고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지역이 난리가 났거든요. 학원 보내는 부모들의 심정이 아주 굉장히 심각해졌고, 실제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환경성 석면피해 구제현황을 보면 20대~50대까지가 321명으로 23%예요. 그런데 석면이 들어오면 잠복기간이 10년~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50대라고 하는 거는 10살 때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학원 다니는 연령기에 이런 석면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조사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요구입니다. 하나는 시행령에 의무를 이렇게 둔 거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1.2%밖에 해당이 되지 않고 학원의 경우에는 10.7%밖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의무대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낮추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요. 올해 이렇게 의무대상 아닌 거를 한다고 한다면, 300군데 한다고 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거는 지난번 보고까지를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300군데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 심정으로 보면 올해는 좀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도 석면조사 예산 증액과 그다음에 시행령 규정 강화에 동감합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기재부가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자랑을 하면서, 그것도 2조 2000억, 전년 대비 17.9%를 늘렸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황당한 안전예산 7선’ 이렇게 발표한 것 중에 환경부의 공단 폐수처리시설사업이 있어요. 이게 환경부의 안전예산으로 안 들어가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요구할 때는 안전예산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기재부에서는 그게 빠

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원식 위원** 기재부에는 들어가 있고 환경부에는 빠져 있다니까요. 거꾸로 얘기하시네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원식 위원** 환경부에서 안전예산이 아니라는 거를 기재부에서는 안전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이천몇억, 그러니까 정부가 안전예산 늘린다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관련부서에는 안전예산도 아닌 걸 일부러 갖다 끼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걸 도저히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환경부에서 기재부의 안전예산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봤는데 또 넓게 보면 과거에 낙동강 폐놀 사건이라든가 폐유기용제 사건 이런 걸 보면 또 공공에서 종말처리를 하면.....

○**우원식 위원** 그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환경부 전체 예산이 다 안전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광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영**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朱永順 委員** 장관님 또 관계 공무원들 모두 그동안 국정감사 받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노후 상수관 개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관의 누수로 인하여 수돗물의 원가가 올라가고, 도시는 누수가 적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요금을 내고 또 농어촌은 누수가 많아 가지고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과 전남을 비교하자면 서울시의 누수율은 3.1%에 그쳤으나 전남은 23%나 됩니다. 국민들이 내는 수도요금은 서울은 t당 565원이고 전남은 814원이나 됩니다. 전남처럼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에서, 공무원들 월급도 주기가 힘든 실정인데 수도요금 부담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이 좀……

○**朱永順 委員** 결국 국비 지원을 통해 노후 상수관을 개량하여 누수를 잡고 생산원가를 내려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동의합니다.

○**朱永順 委員** 올해 환경부에서 정부의 편성안에 넣으려고 그동안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정부안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 국민들의 물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여 482억 4000만 원의 개량비를 반영해야 됩니다.

장관의 생각을 간단히 밝혀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이게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첫해이지만 이거 이상으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저도 예결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퇴직급여 예산과 관련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적립기준은 통상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 예산을 산출해야 하는데 현재 기본금으로 공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당해연도 퇴직자의 퇴직금 지급도 어렵기 때문에 결산잉여금으로 대체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안군 국립공원관리공단 현지를 몇 군데 돌아봤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역대 가장 사기가 충천돼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정부 편성액에 추가로 20억 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4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정부의 재정 어려움 때문에 절반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

다. 그 나머지 20억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섬 지역은 육지와 달라서 급수취약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이걸 보급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1000여 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은 급수취약지역도 많고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서 상수원의 물 부족 현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천년대교와 연륙도가 건설 중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 10년 신안 증도에 증도대교가 건설이 되었는데 그 후로 숙박시설이나 여러 편의시설이 한 5배 정도 증가해 갖고 당초 예상했던 물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광역상수원의 보급이 필수라고 보는데, 보급에 따른 관망 설치가 우선 돼야지 않겠습니까?

올해 실시설계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새천년대교 완공 후에 광역상수원 보급이 1년 이상 걸리는데 올해 예산에는 실시설계 예산조차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관로매설 용역비 30억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의 요청이 없어 가지고 환경부안에도 담겨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검토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자원공사도 해 봤더니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朱永順 委員** 다음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가거도 식수원 개발사업이 반영돼 있지만 이 역시 아주 부족합니다. 가거도는 목포로부터 약 103mil, 약 200km 떨어져 있는 외딴섬인데, 지난번 연평도 같은 데는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주민들에게 모든 편의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살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육지로 자꾸 나와 버립니다. 결국 그러면 그 섬이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섬이고 여러 가지 분쟁도 예상되는 그런 지역인데 다른 지원을 해서라도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계

곡에서 나온 물을 막아 가지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동파가 일어나고 또 급수가 자꾸 중단되는 이중 삼중…… 2, 3일 만에 급수가 되는 이런 아주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는 금년에 실시설계도 어려운 데 추가로 약 7억 5000 정도를 줘서 명년에 실시설계와 동시에 작업이 들어가야 3년 내로 그 주민들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적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지금은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는데 현지 여건이나 그 준비상태가 설계와 함께 착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봐 가지고 착공까지 가능하다라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장관님, 여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朱永順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해에 예산심사를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이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요양수당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간병비는 수용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간병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병이라든가…… 정부 차원의 지원의 형평성 부분을 따져봤는데요, 이미 정부가 간병비 지원을 한 예가 많고 그것을 보상이 아닌 진료비의 일부로서 인정을 한 예들이 꽤 많습니다. 굳이 예를 드리자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여기는 간병비를 월 30만 원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일 때 월 간병비 5만 원, 그리고 산재의 경우에도 상시 간병급여는 일 4만 1000원, 수시 간병급여 일 2만 7000원 정도 이렇게 국가가 간병비를 진료비의 일부로서 지급을 한 예가 이미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

략히 해 주실 때도 지금 불용예산도 있기도 하고 이분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료비 설계를 하라, 그리고 다른 사례에서도 장애 인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비용을 진료비, 장제비 그리고 간병비 이렇게 구성된 예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간병비를 2015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된다, 그것도 특히 중증질환을 앓은 우리 가슴기 피해자들 80여 명 정도이고요, 이분들이 평균 한 3개월을 이미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1인당 한 700만~1000만 원 정도의 간병비 그래서 토털 한 11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환경부의 답변이 형평성 줄 수 없었는데 저는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다른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고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국감 때 이것도 장관님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환경보건법상 ‘방사능 오염도 환경유해인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소관이 환경부냐 아니면 원자력안전위원회냐 이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조사처에서 평가 해석을 한 내용을 보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이 터졌을 때,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한 내용만 하고 있고 환경부는 이 부분은 원안위 소관이다 한 상태라서 이 부분이 구멍이라고 입조치는 해석을 해 났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 났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원안위한테 이걸 더 하게 하든지, 아니면 환경부가 어차피 환경보건법상의 이런 책임을 져야 하므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보호 대책, 위해성 평가·관리,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나 역학조사 그리고 만약에 상관관계가 인정되면, 올 10월에 부산지법에서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렸다 이런 최초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암의 경우는 환경성 질환으로까지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을 우리 환경부가 밟아 왔고 저는 원안위보다는 훨씬 이러한 역학조사, 특히 예방 차원의 경험들은 우리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때 방사능 부분에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환경부가 얘기하셨는데 방사능에 의한 질환도 어떤 환경성 질환으로 상정을 하고, 어차피 그건 전문인력들이, 의료라든가 원자력

전문가들이 수행한다면 사전에 광범위하게 역학 조사도 하고 예방을 해 왔던 그런 큰 구조의 일은 원안위가 오히려 그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는 4개 원전단지가 있거든요. 그 4개 단지에 23개 원전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주변에 역학조사라든지 건강조사를 하는 게 그 4개 지역으로 사실상 압축이 된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역학조사에 착수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 예산이 될 텐데요.

그래서 기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4년에 걸쳐서 한 24억 정도로, 4개년에 했으니까 1년 정도로 보면 1년에 한 6억 정도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환경부가 이번에 갑상선암이 원전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원전에 범상으로 가이드라인 되어 있는 지역보다 밖에 살기는 하지만 수십 년 이상 살았다는 점을 충분 고려해서 이런 판결이 난 만큼 다시 한 번 검토하실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전자파 얘기도 국감 때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 역시도…… 당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국정감사 때 당진에 765kV 송전탑이 있고 그 부분에 사는데 자기 마을은 암 마을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다 이렇게 참고인이 나와서 말씀하신 바도 있어요. ‘너무 많은 주민들이 암 발병을 해서 너무 걱정이다. 그런데 다들 전자파랑 인과관계는 없다 그런다’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감 때 지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좀 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환경부가 나서 주십사 했는데, 이거 분명히 예산 문제일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조치한 것이 송전탑 주변에 가서 전자파를 측정만 하고, 그 데이터만 축적하고 이후로 진행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전자파 측정하는 건 저도 기계 주변 가서 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에 이러한 초고압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이 이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암 발병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주민들, 일부분의 주장이 아니고요, 그 마을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역학조사와 더불어, 이번 국감 때 말씀드렸던 지중화 송전선로인데도, 저희 국회

앞도 180mG가 나와서 저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서울 등 대도시인데 100mG 이상의 이런 전자파 핫스팟(hotspot)이 실제로 존재를 했고요, 한두 군데가 아닌 걸 확인했고 알려 드렸는데 지중화 송전선로의 전자파 노출 현황까지도 더불어 조사를 해야지만이, 특히 그중에 민감시설들, 어린이집 아니면 노인요양시설 등등 이런 데는 특히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자파 관련 역학조사도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두루두루 말씀을 드렸는데요, 액수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마는 구멍이 나 있는 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환경부가 아니면 계속 이대로 방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원안위와의 관계 또 그거에 따른 예산 이 부분은 법제적인 측면하고 실제 현행법상 부처별로 어떻게 기능이 배분돼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관련 부처끼리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해석하고 저희 해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자파와 관련해서는 지중선 쪽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자파가 발암 요인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작년에 독일의 조사를 한번 보니까, 한 7~8년 조사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결론은 불명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순 역학조사가 아니고요,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역학조사 차원에서 규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의 그런 조사사례들을 봐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 이상의 기관,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하나 위원 독일의 사례를 잘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히 무관함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 사람들을 송전탑 주변에 있지 못하도록 이격을 시킵니다. 확실히 안전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대피를

시켜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명확하다고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저는 송전탑 주변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높다라는 결과만 가지고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자파와의 거리를 좀 띄워 놓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방사능 문제는 환경보건법상에 환경유해인자로 방사능 오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초의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원안위에 전문성 때문에 가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는 원안위가 못 하는 것까지도 환경부에 최종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법상 아까 해석 부분 말씀하셨는데 아주 단순한 거고요. 환경부가 좀 회피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영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홍 위원 잠깐 기상청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기상예보가 안 맞아서 기상청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 큰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누차 해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상방송이 독자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이 YTN의 Weather 그것 하나밖에 없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지금 기상방송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기상방송국 추진 문제를 2~3년째 제가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저희들도 방송국 설립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능률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기초적인 검토는 일단 하고 자체에서 여러 가지 국내외 사례들을 지금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내년도에 본격적인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최봉홍 위원 하여튼 연구하셔 가지고.....

○기상청장 고윤화 예, 2억 원을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최봉홍 위원 기상청이 독자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됴므로 인해 가지고 기상청 예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약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정은 운용 불안정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많은, 70% 가까이 이렇게.....

○최봉홍 위원 법정부담금도 징수율이 해마다 적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도 계속 미전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볼 때는 한 5000억 이상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세부계획이나 추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사실 이게 특별회계로 처음에 신설이 될 때는 자체 재원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체 재원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역전이 된 상황에서는 특별회계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재정 당국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봉홍 위원 저는 해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만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4조3항 특별회계 설치 조건 이것을 주장하셔 가지고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도, 세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결국 집행을 못 하는 사태는 일반회계로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합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외부의 다른 사람이 그냥 볼 때는 이것을 환경부 자체가 노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부탁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또 소각장 만들려면 님비현상에 의해서 실제 그 지역주민의 허가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원 때문에 지자체가 허가를 잘 안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매립장이나 소각장 문제를 주민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허가를 다 받아 왔는데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미뤄 나간다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또 생길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그런 게 전국에 몇 군데쯤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지금 제주도 것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얘기 들었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런 지역에는 빨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님비현상이 더 생기기 전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주의 경우에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적정성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가……

○**최봉홍 위원** 예타 보고서가 나온 모양이던데요, 결과가.

○**환경부장관 윤성규** KDI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 그래서……

○**최봉홍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역이고 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나 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환경단체가 상당히 방해합니다. 지금 휴식, 안식년제를 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도 케이블카를 놓은 산을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오히려 케이블카를 놓고 거기에 인도를, 등산로를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아예 땅에 발을 못 대도록 만든 그런 곳의 자

연경관이, 또 동식물도, 더 많은 그런 현상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케이블이나 또 공원이나 올레길이나 만드는 것을 환경부에서는 대강 보면 시민단체로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정책 전환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을 양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요. 이게 왜 케이블카를 선호하느냐, 지자체가 거기에서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전국에 가동되는 케이블카를 보면 제가 볼 때 수익성이 있는 데는 몇 군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은 시설은 시설대로 적자가 나 가지고 지자체에 계속 부담이 갈 것이고요, 건설 과정에서 훼손이 된 것이 그 적정 수익이 안 나면 방치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상으로 계속 또 등산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범사업을 하고 결과를 보면 지자체들이 거기서 성공한 케이스는 어떤 게 성공 요인이고 어떤 것은 실패한 케이스이고 이것을 봐 가지고 아마 지자체가 좀……

○**최봉홍 위원** 지금 광양 쪽하고 광주 쪽하고 남해 쪽하고 몇 군데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보시고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 가지고 자생할 수 있다면 정책 방향을 좀 전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지금 영남알프스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알기로는 영남알프스는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봉홍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쪽의 위에 습지하고 평원하고 있는 그곳에……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나머지 문제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입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님 또 고윤화 기상청장님,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식구들도 다 감기 조심 하십시오. 제가 감기 들었는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감사합니다.

○**한정애 위원**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협력사업 하시는 것이요. 미세먼지도 역시 감기에 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줄이긴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좀 급하게 어쨌든 한중 간에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협력사업 추진하자라고 대통령께서 MOU를 체결을 하시고 이것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이고 또 예산이긴 한데,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그냥 다섯 개 정도 되는 제철소 설치하는 것,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한다는 정도만 되어 있고 아직 그 다섯 개가 어디가 될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안 나오고, 이게 사실은 정책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무적 판단하에 예산이, 그냥 이렇게 판단이 200억, 전체 예산 2000억에서 한 10% 정도를 한국이 부담한다 해서 200억 정도를 2년에 걸쳐서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보기에 예산심의하는 과정까지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지만 무리 없이 소위도 그렇고 상임위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을, 근거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구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다음 주 중에 제가 중국 가 가지고 중국 장관들하고 이것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 아마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자스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차량 수요 자체가 지금 좀 과다하게 예측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다 지금 세계 혜택 주는 것에 100만 원 정도…… 어제 사실

은 기조실장님도 막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많이 하시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환경부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연비가 좋다고 하고 있는 것과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연비와 출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 구매 욕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을 아직 좀 못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4만 대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많은 대수에 어쨌든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계획을 세워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사실 정책적으로 보면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쨌든 소위 과정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환경부도 조금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까지는 세계 혜택 줬음에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이 정말로 연비의 문제 때문에 안 됐는지, 아니면 보전이 좀 적기 때문이 아니었는지…… 왜냐하면 보전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차이는 좀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격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내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윤화 기상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기상산업진흥원 출연금 내역이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그중에 민간 대행으로 장비유지보수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2014년 대비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 대행 취지에도 좀 맞지 않고, 기상청이 애초에 기상산업진흥원에다가 대행 수수료를 일단 예산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흥원에서 다시 또 2차 민간에다가 돈을 주는, 그러니까 수수료의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게 되어 있어서 조금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가능하면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것을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기상산업진흥원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기상청장 고윤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기상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방안과 또 민

간 기상사업자들을 진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적절한 선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내년에는 유난스럽게 민간에다가 주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민간사업자들이 굉장히 위탁해 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요구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관리가 될 수 있느냐, 기관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도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장비별로 어떤 것이 어디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건지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소위 때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장관님께 다시 한 번……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영향인자 조사비용 저희가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어쨌든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을 조금 저희가 요구를 했고 하시겠다는 계획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 하기 전에 어제 봉화군 황산 탱크로리 전복사고 있었던 것, 이게 어제 조금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사실은 어두울 때 이 후속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빨리 대처는 하신 것 같은데 미니멈 1시간 정도는 황산이 유출이 났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시간상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수계 한 2km 하부 지역에서 보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도 어쨌든 나왔고요. 현재의 pH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을 아마 다 수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몇 t 정도 지금 중화 처리를 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게 20t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탱크로리가 20t짜리로 알고 있는데, 출구 구멍이 4개가 있는데 2개가 열렸다고 그러니까 아마 절반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하천변의 토양 속으로도 들어갔고 일부는 하천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한 25km 하류에서는 pH가 4.0까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이상 물고기가 죽고 있진 않은데, 하여튼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정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고 할 때도 이렇게 유해 위험 물질을 취급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안전 조치도 좀 강화가 돼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전복이 되거나 하더라도 그렇게 뚜껑이 잘 열리거나 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도 사실은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석포제련소가 벌써, 이 건까지 합치면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황산이 누출된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고 있는, 하청을 주고 있는 유해 물질 취급 업체도 제대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윤성규 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용남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이 보조금을 지금은 자동차 제작사에게 주는 방식인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기본적으로 제작사에서 그만큼 싸게 팔고 그것을 한국환경공단하고 정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해서 나중에 자동차 제작사가 돈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용남 위원** 그런데 그래도 하이브리드차량이 동급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차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세제 혜택을 주지만 그래도 차 값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내연기관 차량보다.

대략 보니까 소나타2.0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에 한 480만 원 정도가 비싸고요—물론 옵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K5도 대략 700만 원 정도 비싼데, 그 취지는……

이렇게 자동차 제작사에게 100만 원 보조금을 줬잖아 소비자들은 구매 가격이 내연차량보다 비싸잖아요, 하이브리드카가. 그러니까 싸게 산다는 걸 별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걸 별로 실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소비자가 하이

브리드차량을 구매하면 100만 원을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같은 돈을 쓰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어떤 구매 욕구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브리드차량의 확대에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물론 일하기는 그냥 자동차 제작사하고 상대해서 주는 게 훨씬 편하겠지요. 그런데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미미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연차량에 비해서 구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을 전혀 실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보조금 지급 방식을 좀 바꿀 계획이나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 실무 부서한테 그것 한번 검토하라고 이미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남 위원** 아, 그래요?

왜 안 돼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여러 가지 다른 법률들도 개정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만 개정하는 게 아니라 타 부처 소관 이런 법률들도 개정하는 소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입법예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제작사하고 환경공단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 시행 이전에 다른 법률까지 손을 댈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도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좀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일을 편하게 할 생각만 하지 말고 다소 좀 복잡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게 이제 개인정보를 전부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들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

○**김용남 위원** 그런데 돈 준다 그러면 그것 동의 안 하겠어요, 차량 구매자들이? 그거는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돈 준다는 데 자기 정보 제공에 동의 안 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신속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지금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약 404억 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천연가스 버스, CNG 버스에 대한 예산은 또 줄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경유 버스에 비해서 천연가스 버스가 매년 측면에서 훨씬 저감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현재까지는 광역시에, 특히 서울이나 이런 광역시를 중심으로 CNG 버스를 했는데 거의 98% 이상이 이미 개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잔여 시장이 얼마 없고 노후됐을 때 새로 바꾸는 시장이 좀 남아 있는데, 이미 CNG 하이브리드 버스가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CNG 하이브리드 버스로 특·광역시는 좀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여전히 CNG 버스로 하는 것으로 하다가 보니까 전체 수요……

○**김용남 위원** 그런데 수요 조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수원시에서 수원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CNG 버스 수요 조사를 했더니 147대 정도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조사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 책정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 안대로 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배정되는 버스가 2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배 이상 버스 회사들은 오히려 자부담률이 상당하지요. 버스 회사의 경우에 한 85% 정도는 자기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정부 예산 보조금은 한 15%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NG 버스를 구매하겠다고 하는 게 147대 정도 수요 조사가 됐는데, 이것 예산이 줄어들어 갖고 오히려 배정되는 거는 환경부 안대로 하면 20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수요 예측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 한번 다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 CNG 하이브리드 버스가 처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또 공급 여력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기상청장님, 국감 때도 기상항공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의 해명이 계속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셨어요, 기상청에서.

기상청의 해명은 뭐냐면 ‘애초에 기상항공기

관련한 예산이 약 279억이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192억으로 깎이는 바람에 애초 도입하려던 항공기보다 작은 걸 샀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작아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김용남 위원 그런데 이미 예산은 2012년 1월달부터 192억으로 책정이 돼 있었고 기상청에서 이 기상항공기 도입 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192억 예산을 놓고 상정하고 계속 심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3년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명이 계속 거짓말이에요, 기상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가 뭘니까, 도대체?

○기상청장 **고윤화** 당초에는, 최초의 그 계획 단계에서는 새로운 항공기를 사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기상청에서 192억으로 예산이 줄면서 중고 항공기라도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달청 가서는 중고 항공기는 안 된 다라고 그래서 새로운 신형 항공기를 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지금 처음에 탑재하려던 기자재를 못 싣게 되니까.....

뭐 이것저것 다른 걸로 대체해도 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항공기 엉뚱한 거 사놓고 지금 해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방사능측정장비도 원래 525파운드짜리를 싣기로 했는데 작은 거, 무게가 5분의 1도 안 되는 95파운드짜리를 싣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한 번 떴서 측정할 거를 기계를 옮겨 싣고 두 번 떴서 측정하면 된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비행기 한 번 띄우는 데 돈이 얼마인데 한 번 띄워서 측정하고 내려와야 될 거를 내려왔다가 또 옮겨 싣고 두 번 떴서 측정하면 된다 식의 해명인데 저는 도대체 해명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상청의 해명을.

○기상청장 **고윤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김용남 위원 준비하고 오십시오, 하여튼.

○기상청장 **고윤화** 예.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장관님, 환경기술사업 예산을 보니까요 10개 분야에 한 519건인데 55%가 대학하고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45%가 기업에서 추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업 부분만 보니까 대기업이 한 20%를 차지하고 중견기업이 7%, 중소기업이 73%예요.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더 많은 기술사업을 지원하는 건 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 기술사업 내용을 죽 보니까 그렇게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데.

환경부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제가 예산 규모별로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예전의 관례로 보면 예산 규모로 보면 더 차이가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대기업의 연구소를 제외했어요. 사실상 대기업이지요. 그걸 포함시키면 아마 더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심상정 위원 그런데 우선 이렇게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도 그런 활동을 한 3년 넘게 해 보니까 우선 중견기업이 원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개발 했을 때 시장을 확보하는 데 비즈니스 역량을 대기업을 조금이라도 참여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주로 연구를 하더라도 대기업을 참여시켜서 했을 때 시장 확보가 용이하다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들이 많아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하더라도 대기업을 꼭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심상정 위원 대기업을 안 끼우면 오더가 안 되니까 그런 거겠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의 문제고요.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인 문제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시장의 문제입니다, 기술개발 했을 때.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은 다른 시장하고 달라야 돼요.

사실 지금 환경산업시장은 환경부 자체가 가입

니다, 제가 볼 때. 환경시장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문제까지도 환경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토론을 하겠지만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 탓하시면 안 돼요, 이 환경산업 쪽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분야만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환경산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또 이게 뭐 대단한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위주로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제가 보니까 2013년 기준으로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사업, 해외환경프로젝트타당성조사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예산이 15억인데 참여 업체가 22개입니다. 그런데 평균 지원이 6800만 원이거든요. 적은 액수지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기업 셋, 중견기업 10개예요. 1억도 안 되는 사업까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거는 제가 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대기업에서 1억짜리, 평균 6800만 원짜리 지원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인 액수를 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은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잠깐 좀 설명 올릴까요?

○**심상정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와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부터는 대기업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 지원 분야는 시장 탓하지 마시고 환경산업의 특성상 환경부가 그 환경산업 시장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해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대기업 분야가 될 경우에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업 특성, 그 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것 환경부가 하면 됩니다, 환경산업 시장은. 그 점을 제가 하나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습기살균제 문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하나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만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건 지난번 국감 때도 위

원님하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전문가들…… 재신청기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종합해 가지고 결정할 예정이고요.

아까 간병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지원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원인 업체라고 저희들이 보는, 책임 업체라고 보는 업체들한테 구상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불응을 해서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구상권 행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장관께서 111억 원 예산 확보해서 피해자 구제하겠다고 하셔서 작년에 특별법, 장관님 믿고 특별법 통과 안 시켰지요, 저희가. 그랬는데 지금 30억 썼어요. 4등급으로 나눠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구상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정부가…… 이런 자세, 정부 책임도 있어요. 정부 책임 크지요. 지금 정부도 소송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에게도 단호하게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옥시 같은 경우도 작년 여기 국감에 나와 가지고 50억 조성한다고 했는데, 뭐 내부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우선 공식 사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발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많이 죽여 놓고 그 책임 기업이 사과도 안 하는 상태를 지금 환경부가 저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 50억의 사용방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오리무중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경부가 조정과 중재에 실패한 책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더 구체적인 요구를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이것 책임 있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면 우선은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 제품 관리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같은 소홀한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남대 연구소에서 가습기살균

제 화학물질이 폐 이외에 피부·심장·간 이런 데 다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심장·간 이런 데 대한 영향을, 영향 가능성에 대한 확대조사도 좀 하셔야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번처럼 등급도 좀 세부적으로 나누셔야 되고요. 신청기간도 좀 연장을 하셔야 되고요.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68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해외 환경산업 수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상징적인 금액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고 할 때 상대방이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알제리에서 거의 2억불 상당을 모 기업이 수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4억불인가 5억불인가를 수주하고 2차적으로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그런 상징적인 금액으로 타당성조사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제가 지지난주에 베트남을 갔는데 거기 도 중소기업, 일부 대기업 왔습니다. 저한테 한결 같이 얘기하는 게 제가 갔기 때문에 그 관련 부처 장관도 나오고 그쪽의 의사결정층도 나오고 기업들도 나오고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다 상대방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 있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방법이 대기업에게 일부 돈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게 아주 상징적인, 대기업이 볼 때 6800만 원 없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균제와 관련해서는 영남대 연구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센터를 하나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교에. 그래서 내년엔 지정을 해 가지고 그 기관으로 하여

금 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현주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하수관거 정밀진단조사 지원 있잖아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저는 알았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산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313억 원 편성이……

○**민현주 위원** 이게 환경부가 2015년부터 노후관 조사사업 실시할 계획의 예산인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15년부터 16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되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2년.

○**민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2016년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미 조사가 다 끝나나요,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조사는 내년엔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우선 금년에 저희가 급해 가지고 구경 1m 이상 되는 것 이것은 10월 중에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를 지금 집계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저희가 보니까 일단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서서 하수관거는 아니지만 상수관 관련해서도 주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 예산을 지자체가 신청하기까지 이게 조사 완료 가능한 건지 알아봤더니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라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 파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장관님, 어떤 계획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조사비용을 사후적으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한번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예, 하수관거를 통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그게 지금 사실은 사업대상이 조기에 소진돼서 매번 불용이 됐다가 이제부터는 차상위계층의 자가주택하고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하는 걸로 된 것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차상위계층 자가주택 부분하고 새로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복지부 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로였는데요. 복지사업 대상자가 소진됐을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발생하지 않지요, 같은 사업 건이?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간다고는 이해되는데 이 보다는, 개량 중심보다는 제가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예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성격을 좀 넓혀서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일단은 시급하지 않은 대상 확대 초점보다는 새롭게 더 시급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새로 설치하는 쪽으로 확대해 보면 어떻까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지난번에 국감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미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 공급지역인데 연결이 안 된 집이 있는지 이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11월 말까지는 조사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니까 대상 확대 안 되더라도 차상위계층 내에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사업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응용해서 확대해 주시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다음에는 기상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민현주 위원** 저희가 기상청 예산을 죽 보니까요, 특히 ‘날씨경영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관련된 사업 예산을 보니까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한 예산을, 한 항목을 넣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사업평가도 받을 수 있고 사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저기 쪼개기 예산이 들어간 것이 의도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예산을 계속 추가하고 사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가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동안에는 날씨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 사실 기상산업 육성의 원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아이템들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현주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또 이런 식으로 편성하셨잖아요?

○**기상청장 고윤화** 아니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로 들어가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현주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지역별 축제랑 스포츠 행사 지원하는 건데요. 기상산업 활성화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특별기상서비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있었던 지역기후 서비스 산업, 지역맞춤형 기후정보 생산 및 제공 사업하고 유사해요.

○**기상청장 고윤화** 제목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뜯어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농작물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특화된 어떤 지역의 특산물들과 관련된 어떤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것과 또 어떤 특별한 업종, 지역 특화된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민현주 위원** 청장님,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도 설득이 안 되는데 이 예산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상청장 고윤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민현주 위원**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저는 차별화를 못 느끼겠는데요. 안 와 닿는 데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군데로 이렇게 몰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이 아이টে을.....

○민현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청장님 이것 자료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또 비슷한 건데요. '업종별 취약계층 날씨경영 컨설팅 교육' 있지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랑도 겹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씨경영인증 활성화 사업하고 목적이 비슷한 것 아니냐.....

○기상청장 고윤화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현주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끼워 넣기를 하세요? 있는 사업을 제대로 확대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것하고 날씨경영인증이라는 거와는 조금 특성이 다르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사업 아이টে이 분리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희들이 정돈해서 예산을 잘 가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말씀하신 게 목적이 맞다면 충분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끼워 넣기 식으로, 예산을 끼워 넣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나중에 평가할 때도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청장님이 지난 국감 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억울하다는 측면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가 제대로 안 되면 기상청 입장에서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보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관해서 정리하실 부분은 확실히 정리하시고요.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왜 필요한지, 기 산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문별로.....

○민현주 위원 저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기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지금 청장님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라고 하셨으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유사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

하여튼 자세하게 자료와,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민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영 위원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양창영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항공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보유 헬기가 몇 대입니까?

(이인영 간사,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부장관 윤성규 현재 1대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그 헬기가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아주 오래됐습니다. 1997년도에 러시아하고 경협차관 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창영 위원 1대 헬기로 전국에 산재돼 있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국립공원 보유 헬기의 운행시간을 보니까 한 해에 250시간 정도 운영되는 걸로 보고 있고 산림청이나 소방방재청, 경찰청 이런 데하고 비교해보니까 한 2배가량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산림청이 46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이 26대, 경찰청이 20대, 해양경찰청도 16대나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공단이 다른 기관보다 임금도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비 부족 같은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직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헬기가 여러 대가 있으면 기동성이 있고 그래서 안전구조 활동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급한 게

한 2020년까지 3대 정도를 더 들여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사고가 난 다음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헬기사고는 인명피해로 직결되고 또 사전예방이 반드시 필요한데 장관도 보고받았겠지만 이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이 국정의 주요 과제로 선정된 만큼 직원 안전사고 위험 문제 해결하고 또 탐방객의 구조 같은 재난안전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헬기 추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 헬기를 도입하자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내년도 예산에, 국회심의 과정에서…… 전체 도입에 85억 원이 필요한데 그중에 설계하고 계약금으로 한 8억 원 정도 이렇게 하면 내년에 우선 1대 정도는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창영 위원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알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따라서 매년 사업비 지출한도액을 초과한 수입이 여유자금으로 편성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양창영 위원 이런 여유자금 편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각 수계별 여유자금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4대강 수계가 있는데요. 낙동강하고 금강의 경우에는 비교적 여유자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하고 영산강이 기금액 대비 한 12%를 넘어서서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수계기금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토지매수사업 같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조성되는 사업성 기금으로 이 여유자금 과다편성이 기금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적정 수준으로 여유자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연도 말 보유자금이 여유자금으로 편성된 예산과 결산잉여금이 합친 것인데 이

중에 결산잉여금은 수입초과액하고 불용액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양창영 위원 잘못된 수입 예상과 집행 계획에서 발생한 것으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가능하면 사업비 쪽으로 많이, 여유자금을 줄이고 사업비를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과다한 여유자금 운용이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사업변화에 따라서, 잦은 변경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바람직한 기금운용을 위해서 여유자금이 최소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그리고 기상청장에게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월동에 있는 기상관측소가 몇 년도에 설립된 겁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1933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양창영 위원 최근에 건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면 시설물이 노후되었고 또 천정의 붕괴 위험까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예, 많이 낡아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현재 기상산업진흥원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신축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빠른 보수공사조차도 힘든 상황이라는데 어떻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양창영 위원 기상산업진흥원의 시설이 열악한 것은 전에도 지적되었다 그리고 또 예산도 형편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조사로 재난안전 대비를 위한 조속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안 되면 기관 이전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우선 외부 사무공간을 임차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기상청장 고윤화 한 5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지속적으로 시설물이 부식하고 또 석면 위험까지 존재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직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수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각별히 기상청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상 산업진흥원하고 해서 가용할 예산 자원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양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환경부 재정사업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기재부한테 막혀서 잘 안 된다고 그러셨고요.

두 번째로 자체 세입과 관련해서 징수실적을 높이는 방안은 왜 안 됩니까? 47%, 48%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게 분모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예를 들면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에 새로 발생한 신규 부과분을 기준으로 하면 80% 가까이 됩니다.

○**이인영 위원** 누적된 것……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과년도에 체납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악성입니다. 이거를 다시 금년에 또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에 과오급까지 채부과를 했을 때 그게 전체 분모로 들어가면 40 몇%로 되는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징수실적이 체고 되지 않는 이유일 텐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과거 체납분들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압류할 재산이 있다든가 이러면 체납처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담당해야 되는 지자체가 그것을 하는 데는 워낙 많은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 재원이 부족한 게 충분히 예상되는데 그게 뭐 천수답처럼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안 되고 징수실적을 높이는 것도 안 되면 그러면 예컨대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지금 15% 일반전입금으로 배당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분비

율을 한 18%로 올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도 과거에 그것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한 20% 정도로……

○**이인영 위원** 기재부한테 양단간에 어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게 일몰제기 때문이에요, 교통·환경·에너지세가. 일몰제기 때문에 그때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20%를 주장할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에 대한 체납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징수비용 교부금을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징수율이 높을 때는 더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아직 유인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관련해서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런데 우선 하나는 이 법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어쨌든 시행하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법에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행된다고 할 때 말하자면 중·대형차에서 일정하게 돈을 걷어서 소형차한테 보조금을 주는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해결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렇게 될 텐데……

○**이인영 위원** 아니, 잠깐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 안 된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차적으로 모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그것이 시행 안 된다, 입법부작위 상태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에. 그러니까 입법부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라고 표현하면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97g/km로 이후에 배출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100g/km로 이렇게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정책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모순 아니에요, 이런 게?

○**환경부장관 윤성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도전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아니고……

○이인영 위원 그러면 환경부만 도전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건 아니고요. 국익 차원에서 보다 확실한 방법, 강제적인 방법인 이 연비나 온실가스 기준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인영 위원 그 기준으로도 97g/km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g/km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보다도 안 맞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저는 여기서 위원님께 처음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97g에 대해서 변동이 없이 지금 계속 업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이인영 위원 보조금 지원 기준 대상을 100g/km로 하겠다면서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못 들었습니다만……

○이인영 위원 아니, 그냥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하시면 돼요,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환경부장관 윤성규 100g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하이브리드 차가 2.5%, 3% 선으로 아주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제혜택 310만 원……

○이인영 위원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하신 것이고요, 제 얘기는 배출가스 기준을 97g/km로 하겠다고 했는데 하이브리드 보조금 지원은 100g/km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일관성도 없고 정책의 모순이 아니냐 이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g 이하를 하다 보면 또 대상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100g으로 하고……

○이인영 위원 아니, 지금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시행 안 하면 배출가스 기준을 97g/km로 엄격하게 더 가져가겠다고 얘기해 왔잖아요, 여태까지.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100g/km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 정부 정책에 일관성도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97g이라는 것이 금년에 결정한다고 내년에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년도가 20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0에서 97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은 100을 훨씬 넘습니다. 100을 훨씬 넘지만 그중에 100 이하의 것만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인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자동차산업계에서 내년에 당장 100g/km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쏘나타Ⅱ가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고요, K5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가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하면 한 8개 차종 정도가 100g 이하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있었는데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인영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은 재자연화 이런 것들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니터링 예산이 지금 제한되어 있고 또 예산도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범위도 한정되어 있고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대하고 또 조사 범위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10억 가지고는 턱도 없다 이런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조사 범위도 실제로 늘리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10억 원도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아니고 수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계기금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환특에서 좀 확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환해서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환경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환경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예정된 일정대로 예산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체토론 중에 주영순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양창영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한정에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를 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 정책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안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고용률 70% 목표와 고용과 성장, 복지가 선순환하는 고용노동 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시장은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함께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 문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여 청년·여성·장년 등 핵심 대상의 고용촉진과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일자리 지원은 다소 줄어들되 중장기적으로 고용 효과가 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확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총지출 예산안은 15조 5368억 원으로 금년 대비 1조 865억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지출은 2조 497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8977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1520억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운용규모의 총지출은 13조 4871억 원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 7조 7680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5조 86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554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3071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480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 및 임금 인

상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보험료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 규모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5만 명 늘린 30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용센터가 중심이 되어 민간기관과 함께 저소득, 청·장년층 등 어려운 여건에 놓인 분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여성·장년 등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려 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제도를 신설하고 청년인턴제 지원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해외취업지원사업 내 유사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위해 기존의 신규채용형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전환형 지원제도도 도입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자발적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성 보호를 위한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일반회계의 전입금 규모도 증액 편성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장년고용대책에 담은 바 있는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 취업기회 확충, 장년 친화적 직장문화 분위기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 및 신규 편성하여 장년이 생애 기간 동안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현장 직무와 교육·훈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산업계·지역 등의 수요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금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질 관리를 통해 성공 사례를 창출·확산함으로써 청년이 스펙을 초월

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업현장의 재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건설안전보건지킴이를 확대하고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형 질식사고 예방 종합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추가로 개소하는 등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의 고용서비스 및 근로감독 지원 인프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겠습니다.

현장 밀착형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이미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그 성과가 입증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금년 10개소에 이어 내년에는 21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고용센터 내 상담업무 등에 종사하는 7개 직종의 인력을 통합하여 인력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고용분야 전화상담 서비스 제고를 위해 고객상담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관서 권리구제지원팀도 확충하여 임금체불 등 문제 해결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계획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일자리 정책성과가 가시화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향후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세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요약본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생략하고, 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용정책사업 중 직업안정기관운영사업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1개소 추가 설치 예산으로 18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15년 설치지역이 확정되지 않는 등 사전준비가 미흡하므로 예산의 연내 집행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해외취업지원사업 중 K-Move 스쿨사업, 글로벌 청년취업사업 및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을 K-Move 스쿨로 일원화하고 사업물량을 확대하였는데 집행실적 및 경비집행방식을 감안하면 연내에 전액 집행이 어려우므로 관련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의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목표인원을 2014년 대비 5만 명 증가시키고 관련 예산 575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2014년도 참여인원이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목표인원 및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실업크레딧지원사업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보조하는 신규사업인데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의 낮은 신뢰도를 고려할 때 사업 참여 저조가 우려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마지막 하단의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중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사업은 최저임금 준수 지도와 홍보사업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고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업의 활성화에 소요되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기금입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고용보험기금사업과 일반회계 간 구분이 불명확하여 고용보험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 일반회계에서 이관된 사업 중에서도 이관 필요성이 낮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 이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하단입니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사업의 집행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계획 마련이 필요하고 신규 편성된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출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고용동향조사사업은 출연금을 집행하

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출연목적에 부합하게 계획액을 집행하게 할 필요가 있고 청년층 등 단기조사를 신설하여 단기집중실태조사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밑부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일·학습병행제 추진사업은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일·학습병행자격제도가 완비되지 않았으므로 보다 철저한 사업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고용평등 실현사업 중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임신·출산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없이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동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재고용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수준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의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은 신규창출 지원의 경우 연례적으로 연도별 목표인원 대비 지원인원 실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목표인원과 경비가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과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은 현재의 제도설계로는 사업성과가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입니다.

중간 부분의 재해조사 역량강화사업은 2015년도에 9억 1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서 그 기반을 갖추는 등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선진외국 사례 조사 및 국제동향연구 부분도 그 내용을 충실히 하여 신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하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중 업종별 재해예방사업은 정부 계획과 같이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는 안전보건진단 물량을 늘리고 민간 진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산재예방시설용자사업은 올해 대비 2배에 가까운 2000억 원의 지출계획을 반영하였는데 그동안의 자금수요와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용자규모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초과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이고, 최근 기금수지 현황을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과도한 증액으로 기금수지가 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임금채권보장사업 중 무료법률구조지원은 법률구조공단 출연금의 적절한 구분·관리가 필요하며 사건 수가 정체되는 데 반해 계획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8쪽의 근로복지진흥기금입니다.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은 2015년도 계획안에는 신규로 1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첫 번째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스민 위원 장관님께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통합되는 희망리본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인 이혼한 엄마와 3명의 아이들이 같이 사는데 그 엄마가 알바를 하면서 한 삼사십만 원을 더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찾아와 가지고 일을 하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아이를 봐줄 시간도 없고 수급을 하면서 알바를 하고 삼사십만 원 버는 게 일하는 것보다, 120만 원, 130만 원, 140만 원 받는 그런 월급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은 탈수급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수급자로 살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일을 하도록 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렇지요? 정부적으로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같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수급자로서 받는 지원금하고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세금도 안 내는 그런 알바를 하면서 삼사십만 원 버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도 훨씬 더 많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번 국정감사 당시 업무보고에서 취업패가 금년 25만 명에서 내년 30만 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취업 알선을 보다 강화하는 취업중심형으로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업중심형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일부 복지도 필요하고 또 일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서비스를 먼저 하면서 또 거기에 필요한 복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자스민 위원 희망리본사업하고 통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취업패 같은 경우에는 성격은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은? 특히 복지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본적인 부분은 취업패나 희망리본이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기본 성격은 같다고 봅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더 수급자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인적인 서비스를……

○이자스민 위원 훨씬 더 개인적인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나 아니면 사례 관리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희망리본사업은 수급자들의 재활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출발했고 고용노동부의 취업패 역시 경제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어서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수급자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일자리만 주면 지속적으로 스스로 취업을 유지하고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도 올리고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희망리본사업을 이관해 와서는 2014년 참여자가 이월되는 부분만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희망리본사업은 실질적으로 폐지해 버린 겁니다. 취성패의 패키지 I 번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활성공율이 높았던 희망리본을 폐지한 상황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취성패가 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 고용서비스와는 다른 수급자 맞춤형서비스, 그러니까 희망리본이 가지고 있는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하고 지자체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취성패로 합친 뒤로 그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질이 낮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취성패보다도 훨씬 더 보호가 차근차근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자리 서비스를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을 통합한 이유가 단순한 예산이나 사업의 편입이 아니라 사실상으로는 노동부의 일자리에 관련된 전문성을 빌리고 같이 효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한 부분을, 그리고 희망리본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통합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상으로는 비교를 해 봤는데 투입비용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급자 1인이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희망리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1360만 원입니다. 이게 차이가,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희망리본사업이 훨씬 더 적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최소한 정말 정책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6년 동안 희망리본사업을 해 온 전문기관들 활용하고 위탁사업을 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자스민 위원 이게 고용노동부 내 단계별 서비스로 안착해 가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알아보니까 희망리본사업은 패키지 I 로

들어가는는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사업비는 전부다 패키지 II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희망리본에 관련된 민간위탁사업을 했던 기관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지금은 패키지 II에서 민간위탁사업비를 0원에서 723억 원 전부 다 이관을 했으니 그쪽에서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상으로는 이 사람들이 희망리본사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이나 일반인을 하고 있는 패키지 II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게 전문성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희망리본하고 저희 취업성공패키지 I 하고 합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서비스는 취업성공패키지 차원에서 I 중심으로 하면서 또 수급자나 희망리본에 과거에 있던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서비스를 하겠고요. 과거에 희망리본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업성공패키지 II를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기관의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같이 배려해 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자스민 위원 이것은 사실상으로는 원래 기존에 노동부가 하고 있는 사업을, 패키지에 관련되어 노동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훨씬 더 집중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인지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취업성공패키지 소위 청장년 II에 해당되는 사업도 하고 또 희망리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국가 간에……

○이자스민 위원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원래는 취성패에서는 사후 관리하거나 6개월 이하에 관련된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나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번에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취성패에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후에 일자리를 그만뒀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어떻게 되거나 이런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사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례관리 전문 사회복지사가 희망리본에서는 하고 있는데 취업패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리본 대상이 될 수 있는 1만 30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업성공패키지 I 에서 서비스를 하면서도 한 상담사가 과거에는 희망리본은 80명, 우리는 120명을 했다면 그쪽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금 대상을 줄여서 정치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있는 자립지원 상담사들하고 늘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서비스가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리본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없어진다는 자체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소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내년에 진행을 하면서 정말 희망리본사업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취업을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탈수급을 하게 되어서 훨씬 더 좋은, 고객에게 훨씬 더 도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과가 낮아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자스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또 이 부분은 원래 한 번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추가로 하실 분은 위원장한테 질의시간을 더 받고 하십시오. 마이크 나간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마이크를 안 대고 계속 질의하는 이런 습관은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한테.....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석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업성공패키지 I 으로 취업 지원을 하고 또 청년·중장년층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II 로 지원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희망리본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넘겨받아서, 88억 원을 넘겨받아서 신규로 편성을 했고요. 두 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 I 으로 통합하기로 부처간에 합의를 한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정부 전체의 유사 사업을 통폐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업수행 방식은 다릅니다. 패키지 I 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반면에 희망리본사업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해 왔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이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취업성공패키지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취업성공패키지 I 은 저희 고용센터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이석현 위원** 고용노동부가 취업 지원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복지의 성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희망리본사업의 사업 수행기관들은 복지정책과 연계가 되어 있고 또 반면에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지원 대상의 특수성이 있고 또 그간의 잔여 사업을 정리하는 성격이니깐 바로 고용센터가 넘겨받기보다도 잠정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희망리본 수행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을 해 가지고 노하우를 축적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본적으로 희망리본 대상이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다른, 육아랄지

간병이랄지 등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용센터에서 동일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더라도 근간의 저희들 큰 방향이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의 고용복지팀이랄지 자립지원 상담사들하고 늘 협의를 해서 기존에 희망리본을 했던 분들이 저희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함에 있어서도 복지서비스가 축소되지 않고 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걱정이 없도록 잘 해 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또 하나는 고용센터 인력지원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용센터에는 공무원 외에 지금 직업상담원이 두 종류가 있고 무기계약직 상담원이 세 종류가 있고 기간제 상담원이 두 종류 해서 7개 직종의 비공무원 상담원이 있더라고요. 그거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사업별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직종별로 임금과 처우 또 근로조건이 다 달라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계약직을 운용하다 보면, 그런 유례가 참 드물건데, 근로자들 사이에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또 인력을 운용하는 데 비효율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건 왜 이렇게 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국민들께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했는데 저희들이 제때제때 공무원 충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된 사업을 사업비 안에 인건비로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정규 공무원으로 충원이 안 되니까 계약직을 쓰게 된 거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내년부터 이렇게 다양한 상담인력을 직업상담원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큰 틀에서 통합을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예,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통합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그것만 반영이 되어 있지 그 외에 지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이런 근로조건을 맞출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우선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상담사들은 일반회계에서 했고 또 사업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가급적 일반회계로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비나 이런 부분도 좀 인상을 해서 업무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겠지만 기본 어떤 큰 근로조건의 차이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했는데 예산에 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고용노동부가 임금 외 수당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던 걸로 압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한 39억 원 정도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추가로 예산 소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증액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다음에 지적할 문제가, 지금 이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닌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센터의 인력은 국가의 고용서비스 인프라인데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데 이걸 노동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기금에 편성하는 건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도, 그간에는 일반회계하고 고용보험기금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걸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만큼은 일반회계에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했으나 그게 좀 어려웠고요.

다만 그것보다 더 절실한 부분이, 근로조건이 약한 상담사들에 대해서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부

분이 우선시돼서 기금으로라도 해서 일부를 좀 올렸습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기본방향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그걸 일반회계로 인정을 해서 기재부에서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그냥 고용보험기금에서라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올릴 수밖에 없는……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올리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런 부분이 바로잡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상당한 모순인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도 가급적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7개 직종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국정감사 받느라고 장관님 또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고용정책보다는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지역분권형 고용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朱永順 委員** 그런 의미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도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사업은 현재 세부사업인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속에 일반훈련, 일·학습 병행훈련과 함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목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크고 일부 예산의 중복

집행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사업주 일반훈련보다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사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훈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수요를 정하고 또 방향을 정해 가는 데 있어서 지역인적자원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소중하다고 보고 있고 그쪽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리고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지적할 것이 있는데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는 물론이고 일·학습 병행제에서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도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산업별 위원회하고 산업별 센터카운슬하고 지역별 인적자원위원회가 씨줄 날줄처럼 이렇게 서로 크로스체크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런데 16개 시도 중 이 위원회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서울하고 울산 제주 이렇게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울산이나 제주의 경우에는 참여기관 간의 관계정립이나 훈련수요 부족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의지와 대표성 있는 산업계 기관의 참여가 부족하여 미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해당 국에서도 또 해당 청에서도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요, 저도 기관장께 지역인적자원위 구성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조만간에 구성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朱永順 委員** 저도 올 한 해 내내 지역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朱永順 委員** 지역고용정책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에 일부 지역이 빠져 있음으로 해서 사

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16개 시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이 가진 고용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주시고 사업 구조조정 등의 솔루션을 제공해서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사업과 비교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지역고용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우리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등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예산 수요가 많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朱永順 委員** 당초 본 예산을 1000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900억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朱永順 委員** 본 위원은 해당 예산사업의 경우 매년 집행률이 높고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 예산은 원래대로 1000억을 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증액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가 매칭펀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당국하고 최종적으로 현재 요구액으로 정했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리고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의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주도의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사업이나 청년 취업·창업 사업 등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본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과 사업 수행 내역을 살펴보니 지역에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청년 대상 사업보다는 지자체 입장에서 실적이 잘 날 수 있는 일반훈련사업에 치중한 면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사업과 청년층 창업지원사업은 두 가지 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데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본 사업은 지역의 고용 인프라를 채우는 사업으로서의 의미도 강합니다. 실적 위주, 성과 위주의 물량 채우기보다는 지역고용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청년이나 일자리 시장 상황을 좀 봐 가면서 거기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시간선택제일자리 예산을 보니까 98억 정도 증액돼서 총 325억 50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실 겁니다. 이번 10월 15일에 시간선택제 후속대책이라고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까지 지원조건이 엄격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120%로 하향조정하고, 무엇보다 문제되는 게 상용직으로 완화한다 했습니다. 상용직은 뭘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상용직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걸 상용직이라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우리가 이 시간선택제일자리 얘기할 때마다 이 자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노동부장관님께서도 저질의 시간제일자리는 안 된다고, 그거 공감대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 시간제일자리 1년간 임금, 직접노무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용직이 들어오면 누가 봐도 1년 이용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번 완화조건에요.

그런데 증액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건이 완화된 상태로, 지금 신규 시간제일자리 창출사업 토털 223억인데 이렇게 상용직까지 주는 저질 시간제일자리는 저는 증액 커녕 전액 삭감해도 할 말이 없으실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용직 문제 부작용 막으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최저임금의 130%, 무기계약직 이렇게 조건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시간제일자리를 가고 싶고 또 시간제일자리 가고 싶은 소위……

○**장하나 위원** 노동자들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경력단절 여성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하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상용직이라고 이렇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 봤더니 대기업은 일부 수요는 있는데 중소기업이 쉽게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과 협의를 해 봤더니 통상에 정규직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기간 인턴을 한달지 또 시보 기간을 거친달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만 딱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선뜻 나서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처음부터 일정 조건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장하나 위원** 지금 말씀이…… 장관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어서요. 지금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상용직을 하되 그분들이 일정 기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제도를 그렇게 차등화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장치로, 그 전 단계로 상용직도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풀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하나 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재 중소기업에서도 본인이 시간제일자리 원하고 있지만 경력단절 때문에 못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그건 전환형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하신 게 상용직에서 무기계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단계적으로라고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제일자리에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 195억 예산을 썼던 것은 무기계약이라는 안전망이 있어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화된 조건에서 그제, 전액 지금 증액된 부분까지 완화된 조건으로는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단계가 필요하다면 여

기에도 단계가 필요하고 일부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이 상태로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시는 게 아닌가……

이건 다음 소위 때 계속 얘기할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세 단계로 설계를 했는데 소위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도 또 얘기를 드리면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간접노무비 없던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하나 위원** 노무 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1인당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단 완화한 것도 저는 충분한데, 물론 이런 유인책으로 많이 참여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에서 막 참여를 해 가지고 실적은 채울 수 있지만 특히 노동자들 고용안정에 대한 안전망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실적을 쌓기 좋은 구조로만 설계된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후속대책이.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 그런 시간제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직접 지원할 방안이 뭔가를 고민해도 부족할 차에 한 명 고용하는 데다가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했을 때 중소기업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만 만들어 낼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지 정말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증액은 커녕 전액 삭감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이번 일방적인 후속 대책 발표에 대해서 국회도 사실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개막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게 참 저도 아쉽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장하나 위원** 예, 하고, 상용직은 법적 용어도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장하나 위원** 제가 더 드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장관님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또 말씀드릴 것은 전환형 시간제일자리가 이번

에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저희가 논란이 심했었는데 9월 24일에 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하나 위원** 법적 근거라고 해서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시행령이 상위법 고용보험법하고 뭘 관계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고용보험법 25조를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의 고용안정이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고용안정이나 취업 촉진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 놓고 시행령이 있는데 지금 이 전환형 시간제일자리를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시행령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시간제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여기에 무슨 고용안정이나 취업 촉진의 목적이 있나요? 상위법하고 뭘 상관이 있는 시행령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본적으로 우리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하는 데 핵심 문제는 출산과 육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대에 남성보다 더 많은 고용률을 가지고 있다가 30대에 남성과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는 전부 상당수가 시장을 떠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떠나게 해 주는 게 여성들에게 있어 고용 안정에 가장 중요하고요. 선진국에 있어서도 소위 자기가 육아·출산이 되면 일정기간 소위 시간제일자리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발달돼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전환해서 육아와 일이 함께 될 수 있도록 기업의 분위기를 바꿔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고용안정 사업에 저희들은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이번에 신규 하면서 3000명 산출 근거를 보니까 주로 ‘자녀 보육, 취학자녀 돌봄, 간병 등을

말는 30~44세의 여성 근로자로 예상한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했더니 ‘공공 부분부터 전환을 선도하겠다’ 이런 내용도 또 있으세요. 그러면서 ‘공무원, 교사, 공공 부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분위기를 적극 선도한다’ 해 놓고 아래에 ‘전환이 활성화되도록 경영평가 개편한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을 걱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사람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한다고 했는데 경영평가에 들어간다 그러면 혹시 반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압박을 여성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고용부 산하의 우리 공무원들만 해도 상당수가 육아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희망하고 있고요. 다만 여성 근로자들이 희망을 하고 있으나 기업의 문화 때문에 차마 신청을 못 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시간선택제를 했듯이 공기업에 있어서도 이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성 근로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하는 데는 경영평가에서 반영을 하고 이게 기업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노동부 직원들도 원하는데 전환이 안 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아까 기업문화라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돈으로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하면서 그런 문화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1년이나 2년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육아가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원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업이 소위 시간선택제를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지원을 시작했느냐 하면, 소위 시간제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8시간 일하다가 4시간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반을 일하게 되지만 기업의 노무비는,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 등등 해

서 노무비가 반보다는 더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정착이 못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정착돼야만 실질적으로 20대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았다가 30대에 30% 이상 떨어지는 M커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하면서 당분간 끌어가야 기업 내에 하나의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위원장 김영주 1분 더 드릴게요, 얘기하세요.

○장하나 위원 1분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금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가 독일, 네덜란드 모델도 얘기를 했고요, 노동부에서 시간제일자리 도입을 하면서 연구용역했던 내용들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전체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되고 시간제일자리도 도입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그 법 논의조차 국회에서도 원활하지 못하고 정부도 저는 얼마만큼 진정성이나 의지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에 좀 이르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제일자리에 대해서는 무리한 시행령, 무리한 예산증액 그리고 조건 완화 그리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압박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되게 어떤 실적 위주로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본말이 전도됐는지, 실근무시간 단축은 안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다 설명을 주셨지만 소위 때로 구체적인 논의들은 미루겠습니다마는 그런 완화된 조건으로는 전액 삭감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정부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근로시간이 단축, 노사정이 2020년까지 1800시간까지 단축하기로 합의한 만큼 노사정이 힘을 모아서 또 필요한 법과 제도도 고쳐서 근로시간이 단축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또 절실한 부분이 스스로 자발적인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스스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마중물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역할을 정부가 전환형이든 지금 195만 명 경력단절, 노동시장의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이 일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든 채용형이든 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경기도 고양 덕양갑 심상정입니다.

예산 관련된 거는 제가 서면질의로 하고요, 현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도에 보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조만간에 발표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언제 어떤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관계 부처하고 협의도 좀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데 최경환 부총리도 대정부질문 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지금 준비 중이다’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은 공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러 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사자들에 대한……

○심상정 위원 그 부처만 협의하지 마시고 여가환노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건 통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확정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롯데 자이언츠 CCTV 사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장관님도 야구 좋아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학교 다닐 때는 좋아했습니다.

○심상정 위원 저는 고교야구 시절부터 제가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분들 문제를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프로 선수들이 끝만 화려하지 몇 명 빼고는 참 처우가 낮거든요. KBO에서 정한 최저 연봉이 올해까지 2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노동자 절반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거기에 이분들이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에요.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도 자비로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다쳐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산재보험도 안 되니까요.

또 우리 지역에 고양원더스라고 있는데 거기 해체되니까 고용보험도 안 돼요. 어디 가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만큼 지금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저는 프로 선수들도 이제 노동법을 적용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고액 연봉자도 있을 거고……

○심상정 위원 다양한 게 아니라 일부 빼고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조건이 열악한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노동법 적용과 관련해서 우선 계약 형태를 정확히 몰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심상정 위원 아니, 계약 형태가 아니고 일단 2009년……

우선 제가 다른 나라 얘기부터 할게요. 미국은 지금 1922년에 프로야구 선수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노동자성 인정 안하다가 도쿄 지노위에서 노조 설립을 인정해 가지고 85년도에 노조가 출범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야구가 들어온 지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110년입니다. 국가대표 창설 60주년입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도입한 지 지금 33년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리틀야구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가 금메달 땀잖아요. 야구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그 야구 선수들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돌보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에 선수협이 선수노조 설립이 진행된 바 있는데 그때 노동부의, 당시 임태희 장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노동부는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노조 설립하면 설립필증 내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직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83년도에 저희가 근로자성 여부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는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 봤는데 아닌 걸로 했고요. 그 뒤로 이제 계약들이 어떻게 변천돼서 현재의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봐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여부는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예술인법에 의해서 예술인들도 소위 협회하고 해 가지고 특고방식에 의해서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했듯이 만약에 근로자성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특고방식에 의한 산재나 고용보험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위원 201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냈는데 2군 선수들의, 2군만 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2군 선수들에게는 산재나 고용보험법 이런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가 절실하다 이렇게 정부 용역 보고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역 보고서의 결과를 책임 있게 제도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게 노동부이거든요. 지금 장관께서 어쨌든 산재보상보험법이나 또 고용보험같은 경우는 적용을 빨리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검토를 해 보고요, 특고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우선 일본 경우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노동자성을 인정을 안하다가 도쿄 지노위에서 그 설립 인정한 이후에 처우개선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갈등도 많이 줄어들었고 불공정계약도 시정됐고 그래서 지금 일본의 프로야구가 거듭 발전을 하고 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검토를 종합적으로 못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빨리 하시고 그리고 관련 법률들을 검토해서 이제는 노동법의 보호를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 검토 이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나 고용보험 적용은 가능하도록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실태부터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재정 추이입니다.

지출하고 당기수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12년도 6445억, 13년도 3000, 14년도 1900, 15년도 323억입니다.

아까 우리 이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한 사업과 이관한 사유입니다.

고용보험기금 본래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는데 근로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쓰임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이 되지만 돈 없다 해서 당겨줄 것이 아니고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지원금 160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보면 비정규직 모집 후에 정규직으로 만드는 데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 형태가 결국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태로 봐 가지고는 처음에 정규직을 모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6개월은 비정규직을 모집해 버립니다. 하고 난 뒤에 그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기업이나 근로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행태만, 나쁜 버릇만 가르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방법

자체를 좀 바꾸어 가지고 차라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얼마씩…… 50% 하면 그 계산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제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낫지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를 잘못 운용하면 오히려 처음에 기간제로 채용을 했다가, 정규직 채용할 부분을 기간제로 채용했다가 전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2008년, 2009년도에 이 비슷한 제도를 할 때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법적으로 있던 요건이면 무조건 지급하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기간제들 중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소위 공모를 받아서 현재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만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어떤 제도 장치를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를 받기 때문에 그 기업이 정규직 전환하면서 또 그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승인을 안 해 주는 방법으로……

○**최봉홍 위원** 임금의 계산도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전환하면서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최봉홍 위원** 개인별로 전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숫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최봉홍 위원** 숫자가 지금 한 6000명 예산 잡아 놨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최봉홍 위원** 6000명 예정인데 1인당 한 280만원 정도 줍니다. 총금액은 170억이고.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 전부 보태 가지고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안전관리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전부 동일하게 그리 할 겁니까?
하여튼 그것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조건부로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기업이 악용하지 않도록 제동 장치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옛날에 노총에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비가 새 가지고 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저희들 예산……

○**최봉홍 위원** 검토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산편성 할 때 얘기가 없었는데요.

○**최봉홍 위원**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최봉홍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한국노총 연수원 수리 관계는, 저도 10월 말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도 오래됐고 연수원이 일주일 내내 각 단체에서, 사용자 측에서도 또 와서 연수원을 사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활용도는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 얘기 없었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장관님, 지난 국감 때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지금 정년 연장과 관련된 임금피크제의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조금 저조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내후년에 정년 60세가 되기 때문에, 또 금년도 근로시간단축법도 통과되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봤는데 아직 그 부분이 좀, 임금체계 개편이나 이런 부분……

○**김용남 위원** 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약 40억 정도를 증액시켜 놓아서 더 늘었는데, 13.5%를 늘려 봤는데 이게 올해 집행률로 봐서는 반도 못 쓰는 것 아닌가요? 반 조금 더 쓰겠구나. 반은 조금 넘겠지만 불용률이 거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희망컨대는 내후년 정년 60세를 하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획기적으로…… 정년 60세도 노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의무화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현장에서 별로 임금체계가 바뀌는 노력들이, 고민은 하고 있으나 뚜렷한 결론을 못 내고 있어서 만약에 임금피크제 내년에 급박하게 하면, 저희들이 예상컨대는 우선 내년에 임금피크제를 기업들이 도입해서 내후년에 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7~18년도에 정년 60세를 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임금체계가 장기적으로 바뀌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금피크제 제도 활용이 금년도보다는 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증액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지금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새로 들어온 것이요, 이것은 앞서 장관님 위원님 질의 때 나온 전환형 시간선택제하고 중복되어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성격은 좀 비슷한데요. 그것은 개개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소위 출산이나 육아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라면 우리 근로시간 단축은 말 그대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에 대비하거나 교육이나 또는 나이가 많이 들기 때문에 8시간 다 일할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비한 제도입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대상자도 이게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대상자가 중복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육아휴직……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꼭 육아휴직이나 이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전환형 시간선택제 부분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형하고 중복 여부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해 놓든지…… 이게 지금 중복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근로시간 단축형은 기존에 정해진 정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정년이 끝나고 다시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임금이 너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지원해 준다 그런 취지인데요.

대상은 좀 다르긴 한데 그 중복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K-Move 사업에 대해서 지난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역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현재 취업 성공 숫자에 비해서 지금 예산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 과거에 가급적 많이 내보내는 해외 취업 방식에서 팬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내보내자로 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도 해외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연수를 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작년 하반기에 그것을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거기에 맞는 수요나 연수가 적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승인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89% 정도 예산이 소진될 것 같고요. 현재의 추세로 보면 내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과연 숫자가 줄어든 만큼 질이 그만큼 높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상당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통계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작년 6월 이전에 그 정책을 했을 때는 임금 수준이 2000만 원 전후였다면 현재 26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도 연수를 한 뒤에 과거에 한 55%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70% 정도 나오고 있어서 개선은 되고 있

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년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던데 내년에 21개소를 설치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지금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만족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취업률이랄지…… 거기에 각 부처의 팀들이 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가 떨어져 있을 때의 취업률도 더 높고요. 한 20~30% 높고요. 그다음에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한 군데에서 여러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소위 윈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지금 내년도에 설치할 21군데에 대한 지역 선정이나 이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오늘 그 설명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내년에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자치단체의 수요, 그리고 소위 서비스를 가까운 데에서 같이 받을 수 있으면 모르는데 너무 원거리 중심으로 떨어지는 것을 모아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해 가려고 합니다.

○**김용남 위원** 수원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120만 대도시인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입니다.

삼성이 올해 2월에 ‘어차피 2016년이면 정년제가 시작되니까 삼성전자가 출선수범해서 먼저 정년을 임금피크와 연계해서 60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크게 났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퇴직한 고용보험 DB상에서 삼성그룹 소속 직원 전체 퇴직한 사람이 한 1만 230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사람은 188명밖에 안 됩니다.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룹사 차원에서 발표했던 삼성전자 역시 26명, 전체 2100명 정도가 퇴직을 했는데 26명만 정년을 맞고 퇴직했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집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조사했던 이유가, 저희 의원실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삼성SDI를 다니는데 55세가 아니라 사실은 내후년에 실시되는 정년에 대비해서 50세 이상에 대한 반강제적인 퇴직을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이 노조가 없잖아요. 아무도 의견을 집단적으로 대변해 줄 그룹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다 나가는 거지요. 매달 몇 명씩 몇 명씩 해서 거의 10월까지 1만 2000명……

삼성그룹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자리지요? 우리 사회 통념상 그렇게 생각하지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단체협약을 다 분석해 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으로는 정년이 현재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직장에서 퇴직 연령이 53세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 이전에 상당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정애 위원** 상당수가 나오는데 삼성은 임금피크 연계해서 정년 60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도 58세 정년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세 이상에 대해서 그냥 반강제적인 퇴직을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무슨 어쩔 수 없이 부도에 직면하거나 회사가 폐업할 지경에 빠지거나 해서 하는 구조조정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악의적으로 실시하는 사실은 강제 퇴직인데, 주무 부처는 손을 놓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장관님께서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서 많이 좀 나아질 것이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대기업이 우선해서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기

업들에서 실제로는 50 이상 된 사람들을 미리 내보내려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년제도 운영 실태하고, 실제 임금피크제를 쓰건 어떻게 하건지 간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노동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저희들도 하고 실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애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년 60세 법적으로 해 놔지만 그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게 하려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가지고 50이 넘어가버리면 임금 부담 때문에 가급적 내보내려고 하는 이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임금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임금체계를 바꾸는 데 당장 제도 연구가 안 돼 있다면 우선적으로……

○**한정애 위원** 장관님 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렇게 해서 해당 기업이, 해당 그룹이 임금피크와 연계해서 정년 연장하겠다고 발표는 해서 온 국민들로부터 박수는 받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눈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실태조사 해서 이러한 악의적인 방식이 전 사회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 다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건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 국감에서도 좀 얘기가 됐습니다만, 훈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굉장히 나쁜데 실제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것도 좀 없어서 저희가 사실 국감 준비하면서도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훈련기관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

본인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직업 훈련을 제대로, '이 직업을 가지고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실태 조사가 우선 돼야지만이 뭐가 좀 추진될 수 있으니까 그 해당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직할 때 위원님처럼 훈련교사들의 근로조건이 낮은 상태에서 좋은 훈련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한번 그때 일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저는 훈련기관들이 가급적 대형화·전문화 되어야 거기에 장기근속도 하게 되고 또 훈련교사들도 거기에 맞는 처우를 해 줄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기관의 대형화·전문화 그런 부분을 같이 두면서 훈련교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되면 좋지요.

어쨌든 기관이 좀 안정화가 되고 그래야지 거기 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한정애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된 사업들이 몇 개 눈에 좀 띵니다.

일반회계가 부족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일반회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은근슬쩍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한 사업들이 몇 개 있고요.

그게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장년취업인턴지원 그리고 고용센터의 인건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인데요. 타 부처에서 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하던 것들도 역시 이관 받은 것 이런 것들도 일반회계에 있던 것이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다시 이관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건 소위에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금을 받아서 고용을 촉진하거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또 직업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근로자들한테

도움도 되면서 사업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일부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센터의 인건비 문제는 저희들도 일반회계로 다시 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애 위원 거기에다가 좀 덧붙여서 실업크레딧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법상의 근거 규정이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거는 근거 규정을 입법해야 됩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정애 위원 입법은 안 됐는데 지금 예산만 먼저 들어와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정애 위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영 위원 K-Move, 해외취업종합상담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해외 취업과 관련해서 대면적인 오프라인으로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한 종합상담센터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서울에 없습니다.

○양창영 위원 게다가 또 각 기관별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들은 상당히 분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로 취업하려는 청년들에게 의사결정상 오류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정보망은 내년 5월까지 완결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청년들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 설치 필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는 K-Move, 해외 취업에 대한 홍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국내 취

업을 선호하지 해외로 취업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이 국내 취업난의 대안으로 K-Move를 홍보하고 또 활용하려 하면 몇 년 지나도 이 사업 성공 못해요.

저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해 본 사람입니다. 해외에 취업하려고 나가는 것이 마치 대접받고 그럴싸해 보이는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심어 주려고 그러지 말고, 고생하면서 또 자기 스스로 어떤 도전정신을 갖고 개척하면서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딛고 올라가겠다는 마음가짐을 심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런 해외 취업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해외로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센터를 통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경험자들의 교육, 또 해외에 나가서……

옛말에 초년고생은 꺾다도 한다고 좀 고생하면서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 서울이라도 그런 종합상담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취업이 아주 고단위의 일자리를 우리 국내 근로자한테 오라고 기다리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년 이내는 정말 어려운 일자리에 가서 경험도 하고 또 언어도 향상하고 또 그런 게 발판이 돼서 2, 3년 흐르면 괜찮은 일자리로 그렇게 가도록 저희들도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의미로 하고 있고요.

또 이미 해외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을 멘토로 지정해서 그 멘토들이 국내에 그룹으로 해서 그런 멘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다음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분의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주요 특징이 기본적으로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이 없는 일자리, 또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짧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짧게 일하는 그 세 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추진해 온 기간이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 다만 인건비 지원 실적도 증가하고 있고 또 도

입 기업들도 인력난이 해소됐다거나 또는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아직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부분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전일제로의 복귀 보장을 지원 요건으로 설정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전일제로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원금을 환수한다든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든가 하는 사후 관리 차원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세워 봐야만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 견해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 시간선택제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도 자발적인 시간선택제는 말 그대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비정규직 개념에 넣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시간선택제 늘어난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4대보험 가입률이랄지 자발적 시간선택제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는 아주 낮긴 하지만 새로운 썩이 좀 돌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위 말해서 자발성이 아닌, 비자발성으로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면서 자발적인 부분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대로 이미 전일제로 들어왔다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시간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때 요건을 볼 때 전일제로 돌아오는 부분이 보장된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지역 설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

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개소 신설에 드는 비용이 21억 원으로 되어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하는 20개소에 대한 비용이 한 162억인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개설된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에 최종 설립이 되기까지 한 1년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 또는 전환 계획 중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에도 상당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번에 책정된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남양주를 할 때는 한꺼번에 하자라고 관계 부처 간에 합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랬고. 지금은 이미 그 기본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고 또 내년도 부분을 이미 오늘…… 지방자치단체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선정을 해서 내년에, 불용 방지뿐만이 아니고 가급적 일찍 설치를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서 서비스가 일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또 아직까지 설치 지역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예산을 적기에 그리고 또 적시에 사용하는 데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하여튼 11월까지의 저희들이 수요를 다 받아서 가급적이면 금년 말이나 1월 초까지는 선정을 해서 상반기에는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그냥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로 여쭙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지출이 3.7% 정도 감소한 거에 비해서 기금 지출 증액은 한 8.5% 증가한 거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중에서도 근로복지기금 지출은 32.9%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10.1%가 증액된 걸로 나타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첫째는 고용보험기금……

○이인영 위원 일반회계로 해야 할 사업을 기금 지출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좀 변형된 것들이 많은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사업 중에 그동안 고용보험과 일반회계로 나눠서 했던 부분들 중에, 그러니까 사업주나 재직 근로자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고용보험기금으로 돌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하고자 했으나 여건상 못한 부분이 고용센터의 인건비 부분은 과거에는 일부 일반회계, 일부 고용보험으로 했었는데 그중에 근로조건이 너무 격차가 있어서 근로조건을 올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일원화해서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정부 재정배분…… 전략적인 재정배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배분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고용노동부가 정부 평균 4.3% 증액하는데 일반회계가 고용노동부는 3.7%가 감액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45개 기관인가 48개 부처 중에서 45위인데요,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에는 저희 일반회계가, 원래부터 일반회계가 많지 않았는데 그중에 사회적기업……

○이인영 위원 이게 전체 정부예산 중에 몇 %인지 아세요, 고용노동부가 지금 일반회계 쓰고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0.7%……

○이인영 위원 0.7%입니다. 거의 여성가족부 수준이네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이나 산재기금, 기금을 통해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즉 정부재정으로 돼야 될 부분들이 기금운용을 통해 가지고 대체되는 것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번에 일반회계 부분……

○이인영 위원 그리고 이 기금의 성격 자체가,

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가 주로 많이 하겠습니까만 이 기금을 말하자면 내는 이런 것은 노사가 주로 내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 것의 불일치도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번에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돌리는 부분은 사업주나 근로자 지원 쪽의 사업들을 돌렸고요.

○**이인영 위원** 예, 저도 그 자료는 봐요. 지금 중장년 취업 문제라든가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제 문제라든가 청년취업인턴 문제라든가 고용센터 인력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죽 보고 있어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니까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중장년 취업지원 인턴이나 이런 부분은 다 사업주의 지원들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지고 사업주의 채용 촉진이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용보험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가재정으로 하던 부분들을 기금으로 운용해서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그것은 고용보험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이인영 위원**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고용노동부가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기금을 내는 당사자인 노사와 달리 또 이게 정부가 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이게 좀 불일치되는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것이 그게 좋은 거냐 이거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인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부 재정배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일반회계 포션을 절대적으로 늘려 나가야 할 판국인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맞습니다.

○**이인영 위원** 기금을 끌어다 쓰는 이런 또 다른 정부부처, 기재부의 어떤 편리함 이런 부분들에 그냥 같이 동조해 버린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 사업은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일반회계 쪽

에……

○**이인영 위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취지인지 명백히 아실 텐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들이 모성보호에 대한 일반회계 진출 지원 확대랄지 또는 센터 운영이랄지……

○**이인영 위원** 올해 처음 해서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된다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고용노동부는 제가 볼 때는 기재부나 이런 데에 대등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막냇동생처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 일반회계 부분이 이번

○**이인영 위원** 전략적인 배분과정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고용노동부의 전체 포션을 일반회계 과정에서 늘리는 쪽으로 명백하게 스탠스 잡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일반회계 부분이 이번에 증액이 적게 보였던 것은 818억 원 사회적기업 지원 부분이 저희가 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줬던 부분인데 이번에 지역특별회계로, 지특회계로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이인영 위원** 그 800억이 간다고 해서 이 마이너스 3.7%를 다 설명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의 영역이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 증액을 하고, 해외취업 지원이라든가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일·학습병행 운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집행실적이 부진한데도 과다 증액을 했고,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노동부 내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이런 예산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증액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소위 과정에서 다시 확인할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연기금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투자풀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투자풀 방식이 아니고

요.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저희 본부에 팀을 하나 두고 11개 증권사에 일정 금액씩 나눠서 그 증권사가 다시 자산운용사를 이렇게 통제해 가지고 있는 방식인데, 그것을 열한두 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두세 명밖에 전담을 못 해서 위험성 판단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서비스를 못 하고 있어서 두세 개로 또는 한두 개로 이렇게 전문기관으로 묶어서 하게 되면……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연기금 투자폴을 운영했던 것하고 비교해 보면 수익률이 오히려 한 1% 이상 높게 나타나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인영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변경해야 되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검토를 했고요.

○이인영 위원 물론 검토하셨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해야 되느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전문가 그룹을, 최소한 20~30명이 거기의 우리 기금만을 전담해서 하는 게 위험성도 줄이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그거야 고용노동부가 직접 별도로 외주 주듯이 자산운용팀을 따로 꾸리지 않고도 자체 내부의 인력을 확충한다거나 전문가들을 더 확충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밖으로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자체 내에 20~30명의 전문인력을 가지고 하는 방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인영 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어느 한 자산운용회사로 넘기면 그것이 오히려 경쟁도, 경쟁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역으로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지적도…… 저도 와서 그 고민이 있어서 최소한의 경쟁체제는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인영 위원 고용노동부가 주관사를 선정하는

기준, 절차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과연 그런 것들이 효과적인지, 수익률이라든가 등등 안정성에서 하나로 모으는 게 좋은지 다양하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운영성과들을 봐 가면서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급속하게 바꾸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언론 같은 데 흘러나오는 거 보면 좀 이상한 얘기들도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한두 명이 해서 안 되겠다, 전문가 풀을, 우리 이것만을 전담해주는 인력이 최소한 20~30명 있어야 되겠다 했고요.

그다음에 한 1년 이상 정말 거기에 전문가로 구성, 자산운용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죽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주 위원 장관님, 제가 7월에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시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가사노동시장 이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질의드렸었고 그래서 가사사용인 법적 보호하고 제도적인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드렸었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장관님이 답변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 용역도 의뢰한 경우가 있고요. 박지순 교수 외……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민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의 가사서비스 근로자들을 제도화시켜서 지하경제 양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성이라든지 또 일자리 보호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지요?

또 정부가 이걸 좀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쯤에 적극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해 볼 계획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주고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종사하는 분의 근로조건의 향상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일정 교육을 받아서 전문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맡기는 어머니들의 신뢰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용을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최소한 법적용이 어렵다라면 가이드라인 형태라도 우선 분위기를,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장관님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50%의 담보 상황입니다. 계속 담보…… 아무리 노력을 해도 50%를 잘 못 벗어나요.

문제가 왜 그러냐를 보면, 일하는 여성들은 주변에 많은데 왜 이렇까 보면 비공식화된 부분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가사서비스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비공식적이고 국가의 공식으로, 제도권에서 배제가 돼야 되는지, 근로자성 인정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일단 고용노동부가 일차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첫 발짝을 내딛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이 일자리 찾아가는 과정에서라도 자기비용을 좀 없애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통계도 공식화되고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좀 수면 위로 다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렇지요. 일하는 한국 여성들이 너무나 제대로 재평가를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60% 이상의 여성 고용률도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비공식 부문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큰 취지에도, 국가 큰 정책 흐름에도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방향이 잡히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예.

예산집행 관련해 가지고 증액사업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취업 지원 사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고요. 지금 청년들 일자리 문제 심각한데 청년취업 경로를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꼭 성과를 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집행률이 매우 떨어져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증액되는 거고요. 보면 저는 이걸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했느냐 이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투입된 예산이 충분히 활용이 돼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보면 특히 K-Move랑 GE4U 사업이 지금 좀 저조한데요. 지금 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사업이 실적을 못내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이 제도 자체가 실행되는 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구조적으로 어차피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GE4U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전달체계가 지자체하고 지방대학 예산 매칭이지요, 해외 취업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그런데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도 지금 열악하고요. 지방대학 중에 학생들 해외취업을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전달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가 없고 예산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해외연수취업하고 GE4U 자치단체나 대학의 매칭펀드가 필요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전문대학생들 보내는 사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를 다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또 하나는 취업애로 청년층 사업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업실적이 부진해요. 보니까 의지가 없었더라기보다는 이것도 또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서 구조적인 제약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 집행하는 과정을 죽 보니까 기초생활보장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여성 가장들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적인 상황이 좀 안 좋은 분들이지요. 일단 해외취업에 필요한 항공료하고 초기 체류비용 지원해 주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시기가 사후정산 방식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장관님, 상식적으로 이분들이 취업애로층이고 경제적인 빈곤층인데 어떻게 먼저 그 돈을 들여서, 자금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취업을 할 것이며 이걸 사후정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처음 설계부터가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고용노동부에서요. 이것 어떤 식으로 개선할 계획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하신 정산 방식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애로계층이라고 미리 딱 해 버리니까 또 우리 젊은……

○민현주 위원 낙인이 찍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낙인효과도 있고 그래서 일반 해외취업지원금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방식은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것은 또 예산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조금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지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내년에는, 내년 저희 예산 할 때는 이 관련된 사업들이 좀 성과를 내세요, 더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만큼 보람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인영 간사님.

○이인영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는데요. 이것 사업의 성격 자체를 반대할 것은 아니지만 순서들이 좀 바뀐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과 관련해서 현행법에는 도급회사에 지원하는 부분들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법이 정비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입법예고도 하고 그러신 건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말하자면 법이 확정이 안 돼 있는데 법이 나중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부수법안……

○이인영 위원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확인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산부수법안으로 저희들 100억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좀 확실하게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내년……

○이인영 위원 법의 개정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짧은 요약보고서에는 없지만 전체 두꺼운 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 예산……

○이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치유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법으로 이게 개정돼야 되는 거면 법이 개정도 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굉장히 웃기는 일이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을 종합 검토한 저희들 예산 관련 법안으로 했고요. 시행시기를 그래서 내년 7월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더 깊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건 기본적인 걸 테니까요 다시 한 번 확인, 저도 확인하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더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법이 바뀐 상태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법이 바뀔 거라

는 것을 추정하면서, 예상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그런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일반 회계로 이렇게 잡혀가는 게 맞는 거지 기금이나 이런 것들 그냥 막 함부로 끌어다 쓸 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였는데 저도 다시 확인해 볼 테니까 그런 측면들은 꼭 이 사안만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위원장 김영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저……

○**위원장 김영주** 몇 분 드릴까요?

○**이자스민 위원** 3분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주** 3분요? 예.

○**이자스민 위원** 장관님, 다름이 아니고요.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리본사업 관련된 희망리본사업대상자 즉 수급자하고 차상위의, 취업패 정책으로 집행을 하게 될 때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집행을 하게 될 건지 자세한 단계별 자료를 우리 실로 보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것은 우리 해당 실국장이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예, 우리 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희망리본사업을 취업패로 통합 폐지할 것이 아니라 취업패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희망리본사업비를 372억 원을 편성해서 수급자 복지·고용 서비스의 특성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에 시행을 할 거니까.

무엇보다도 6년간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수행기관도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통합하는 이유가 단순 예산이나 사업에 편입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으로는 노동부의 일자리와 전문성을 빌려서 정말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서비스를 받는 우리 조건부 수급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고용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가 더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촘촘히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나머지 것은 다 서면질의를 할 텐데 이것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아직까지 30% 내외의 높은 중도탈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60%대의 낮은 정규직 전환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한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건데 문제되는 것은 여성수의 비율이 사업대상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35% 정도 됩니다, 여성이.

○**이자스민 위원** 그렇지요. 취업지원금이 제조업 생산직, 전기업, 전기·전자,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이것 말고도 조금 더 인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성 비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사실상으로 이 지원 업체가 좀 더 여성을 선호하는 그런 업체들을 좀 포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업종에 저희들이 혹시 빠져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빠져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업체가 참여율이 낮다라면 해당 업종의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여성들이 갈 수 있는 데를 확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사실상으로 여성들은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자스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의 고용노동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1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

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정된 일정대로 예산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심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체토론 중에 권성동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이석현 위원님, 문대성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주영순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양창영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한정에 위원님 그리고 본인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김용남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 양창영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이인영 간사님께 특별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공식 수석전문위원과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권성동	김영주	김용남	문대성
민현주	심상정	양창영	우원식
이석현	이인영	이자스민	장하나
주영순	최봉홍	한정애	

○청가 위원(1인)

은수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전문위원	김양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윤성규		
기획조정실장	이재현		
환경정책실장	백규석		
물환경정책국장	오종극		
자연보전국장	남광희		

자원순환국장	홍정인	정희민	기진석
기후대기정책관	최정나	홍희민	진석섭
상하수도정책관	이이이	윤정희	섭균철
환경정책관	김이백	이민영	호용훈
환경보건정책관	김이백	영운	석만렬
국제협력관	이박송	형계병	근영철
대변인	황양이	정필복	규재영
감사관	정유김	승	직균
한강유역환경청장	김김	삼상	배진환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이박	시보	주최
금강유역환경청장	김최	용재	천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진병렬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동균
원주지방환경청장			석관
대구지방환경청장			동철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원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규상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성준
화학물질안전원장			진관
국립환경과학원장			영동
국립생물자원관장			재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원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태규
이사장			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권영
국립생태원장			권선
기상청			
청장	고이욱	윤재명	화진병
기획조정관	이	재	명
예보국장	이	명	희
관측기반국장	유	성	준
기후과학국장	김	정	진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정	양	김
수치모델관리관	정	김	남
지진관리관	양	이	권
운영지원과장	김	박	이
국립기상연구소장	남	이	권
국가기상위성센터장	이	권	태
기상레이더센터장	박	이	정
항공기상청장	이	희	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이	기	권
차관	고	영	선

기획조정실장 심 경 우
 고용정책실장 이 재 흥
 노동정책실장 권 영 순
 인력수급정책국장 박 화 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 경 덕
 노동시장정책관 정 형 우
 직업능력정책관 나 영 돈
 고용서비스정책관 문 기 섭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이 수 영
 근로개선정책관 권 혁 태
 노사협력정책관 임 무 송
 공공노사정책관 송 문 현
 정책기획관 김 중 열
 대 변 인 임 서 정
 감 사 관 조 병 기
 운영지원과장 김 민 석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 원 장 김 대 환
 중앙노동위원장 박 길 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 재 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영 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박 승 규
 한국고용정보원장 유 길 상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 백 낙 문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 현 택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 우 영
 한국잡월드이사장 장 의 성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 진 규

【보고사항】

○의안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 권성동 · 강기윤 · 김희선 · 박창식 · 김상훈 · 김기선 · 김재원 · 한기호 · 김용남 · 송영근 · 이완영 · 유승우 · 문대성 · 이자스민 · 민현주 의원 발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 주영순 · 나성린 · 양창영 · 최봉홍 · 서용교 · 김종태 · 이완영 · 이자스민 · 김상민 · 이종훈 · 한정애 · 김용남 · 심상정 · 이인영 · 권성동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 이자스민 · 이한성 · 윤명희 · 홍철호 · 박윤옥 · 유승민 · 조명철 · 이에리사 · 이완영 ·

김태흠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6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4. 10. 6 홍영표 · 김영록 · 심상정 · 이윤석 · 김경협 · 이목희 · 안규백 · 이인영 · 전순옥 · 서기호 · 조정식 · 장하나 의원 발의)

10월 7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0 민병주 · 김상훈 · 김성찬 · 김태원 · 김한표 · 박창식 · 서상기 · 손인춘 · 송영근 · 이병석 · 전하진 · 조명철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0. 10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13일 회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 10. 17 정부 제출)

10월 20일 회부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법안

(이상 2건 2014. 10. 22 정부 제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2 이인영 · 박원석 · 이개호 · 전순옥 · 이찬열 · 이학영 · 최규성 · 김성곤 · 한명숙 · 이석현 · 우원식 · 홍영표 · 최동익 · 노영민 · 홍의락 · 유은혜 · 인재근 · 은수미 · 장하나 · 김기준 · 한정애 · 정성호 · 김태년 의원 발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2 이인영 · 박원석 · 이개호 · 전순옥 · 이찬열 · 이학영 · 최규성 · 김성곤 · 한명숙 · 이석현 · 우원식 · 홍영표 · 최동익 · 노영민 · 홍의락 · 유은혜 · 인재근 · 은수미 · 장하나 · 김기준 · 한정애 · 정성호 · 김태년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2 이인영 · 박원석 · 이개호 · 전순옥 · 이찬열 · 이학영 · 최규성 · 김성곤 · 한명숙 · 이석현 · 우원식 · 홍영표 · 최동익 · 노영민 · 홍의락 · 유은혜 · 인재근 · 은수미 · 장하나 · 김기준 · 한정애 · 정성호 · 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5건 10월 23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4. 10. 23 정부 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3 김상민·이만우·김을동·이완영·문정림·주영순·서용교·홍지만·이한성·박윤옥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3 이명수·김기선·김현숙·신경림·박윤옥·이종진·김제식·김을동·이목희·김정록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24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4 양창영·최봉홍·박창식·이우현·은수미·신성범·김정록·정문헌·주영순·이종진·황영철 의원 발의)

10월 27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7 우원식·전순옥·이인영·이학영·윤관석·은수미·박홍근·배재정·장하나·장병완·김현미·이미경·김상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7 우원식·전순옥·이인영·이학영·윤관석·은수미·박홍근·배재정·장하나·장병완·김현미·이미경·김상희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7 우원식·전순옥·이인영·이학영·윤관석·은수미·박홍근·배재정·장하나·장병완·김현미·이미경·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28일 회부됨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14. 10. 23 정부 제출)

10월 29일 회부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2014. 10. 29 정부 제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9 김광진·남인순·노영민·박남춘·박민수·박홍근·유기홍·임수경·정성호·최민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3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014. 10. 1 정부 제출)

10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고서 제출

국회감사요구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요구안」 감사결과보고서

(2014. 10. 13 감사원장 제출)